

인권정보자료실  
R1.1.2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제2247호 ~ 제2366호

합본 20호  
(2003년 1월 ~ 6월)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한층 더 깊어졌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때 보더라도 한반도 전역에서 진정되고 있다.

다만 4·3에 대한 논의가 예전만큼 87년 6월 인권이후 17년 6월 17일 4·3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87년 6월 17일 4·3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4·3의 진실 규명도 계속되고 있다.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4·3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87년 6월 17일 4·3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20호

2003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20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민권운동사랑방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숍>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숍>이 그것. 밀려드는 진정사건과 눈앞의 실무 처리에 급급해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던 인권위를 보다 못해, 인권단체들이 먼저 전략적인 고민에 나선 것이다.

29일 낮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회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와 함께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제로 첫 번째 워크숍(아래 워크샵)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표방했던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태스크포스팀은 ‘5월 실태조사, 6-7월 연구, 8-9월 청문회’ 등과 같은 단선적인 일정만 내놓고 있을 뿐, 전략적인 사고를 담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호법과 같은 반인권 법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지지여론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은데도, 태스크포스팀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활동만을 계획한다면 이후 사회보호법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의 결정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범용 활동가는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하는 것

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사회보호법의 문제와 대응계획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의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

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때 범죄의 발생 이유에서부터 감호처분에 처해지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초 참석을 약속했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유현 위원이 워크숍 시작 30분전에 불참을 통보, 유위원을 대신해 참석한 인권위 실무담당자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이 인권사안에 대한 ‘조언·자문기구의 위상’인지, ‘스스로 활동과 운영을 책임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는 위상’인지를 둘러싸고 인권위 실무자와 인권단체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인권사안에 대한 조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이라면, 인권위가 기존에 취해왔던 인권현안 대응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태스크포스팀의 위상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인권위에 보낼 계획이다. (고근예)

### 주요 사면·복권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석방) 13명 : 강성철(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장), 김강일(전국철거민대책위), 김경환(전 <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김대원(전국대, 한총련 밀입북 사건),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손준혁(한총련 6기 의장), 양승종(강원지역 민중대회 폭력사건), 유병권(한총련), 이창호(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임태열(민혁당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 가석방·형집행정지 상태에서의 잔형집행면제·복권 39명 :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강재우(일명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한상(전국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정수일(일명 ‘간수’, 외국인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홍준표(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황인오(중부지역당 사건) 등

■ 선고유예·집행유예 상태에서의 형선고실효·복권 916명 : 고남권(대우차 정리해고 특위 위원장), 박창균(범민련 남측본부 간사), 윤여창(한총련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이현수(범민련 남측본부 재정위원장), 이흥우(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여(롯데호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 단병호(민주노동당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대연(영남위원회 사건),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설>  
 · 잔형집행면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것. 사면된 형에 대해서는 재집행 못할.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즉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

#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 2003년 5월

### (제2327호 ~ 제2347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1일(목)

제 23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오태양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님의 불살생 계율과 일체의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한 김 씨는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 내내 불교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2000년부터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아래 대불련) 목포지부 지부장, 대불련 중앙 교화포교 부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평화·통일 염원 전국순례, MD반대 활동, SOFA 개정을 위한 108배 정진 등의 평화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군복무와 종교적 신념과의 충돌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된 김 씨는 입대 후 징총을 거부할 마음으로 지난 4월 22일 입영장소로까지 향했다가 다시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길을 택했다. 예초 부모님께 누를 끼칠 것을 염려, 군내에서 조용히 수감생활을 할 계획이었으나 입영절차를 밟던 중 징총거부 의사를 밝힌 김 씨를 군 관계자가 둘러보낸 것. 김 씨는 당시 군 관계자가 "징총을 거부하는 자를 굳이 입대시켜 영창에 가둬둔들 맞하겠나. 여호와의 증인 외에 불교를 이유로 징총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다"며 사회에 나가 병역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감옥에 갈 마음까지 먹은 터에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

다고 판단, 결국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이후 김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로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경찰의 출두명령서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오태양 씨와 탁났한 스남과의 만남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김 씨는 "군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군대가 평화라는 필요에 의해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 씨는 향후 출가할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불교계에서도 종단 차원에서 병역거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등 10개 불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양심을 언제까지 철창 속에 가두어둘 셈인가"라고 물으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병역거부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날 지지 성명을 내고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는 불교신앙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켰다. [배경내]

한국전쟁정후 민간인 피학살자를 위한 해원곳

▷ 때 : 5월 2일(금) 오후 5시 30분  
▷ 곳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흐름과 쟁점

###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4월초 국회 앞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뜨겁게 달궜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 (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직접 파병안 통과를 설득하고 나섰고, 국회도 결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4/2).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파병의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4/8).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쟁시작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을 남긴 채 사실상 전쟁이 종료됐다(4/10). 이렇게 총성은 멎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반전평화를 염원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는 계속됐고(4/12), 이라크에 의약품과 지원물자를 보내는 활동으로 반전평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한편, 한국군 파병 선발대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는 반전평화 시위대의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4/17), 본대가 출발하는 날에도 항의시위는 계속됐다(4/30).

### 2. 양심수 1% 석방...수배해제 소식도 감감

4월말 새 정부의 양심수 첫 사면이 예정된 가운데,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백 50명이 양심수 45명의 전원 석방과 한총련수배자 176명의 수배해제를 요구했다(4/8). 이어 인권단체들은 병역거부 양심수 1천1백여 명도 함께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병역거부자들이 1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추세를 감안, 과거 3년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산 2백52명의 병역거부자라도 우선 사면할 것을 요구했다(4/10). 그러나 첫 사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의 '선별' 사면에 그쳤다. 113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와 32명의 미결 양심수는 이에 제외되어 풀려난 양심수는 13명에 불과했고, 수배해제 조치도 없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4/29).

### 3. '씩은 동아줄'에 매달린 노동자들

작업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급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급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구하며 노동부를 향의 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4/14). 이렇게 중앙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4/22). 한편, 철도노조 역시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으로 올해만 들어 벌써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자, 철도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불모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안 된다며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원충원 등을 요구했다(4/13). 파업에 당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철도청과의 협상에서 철도노조는 인력충원과 1인승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한 개인정보 이관을 반대하는 1천7백여 명의 학생 동의거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4/25). 한편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결정을 2주 뒤로 연기했다(4/28).

### 논평

-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4.12)
-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죄 건가(4.19)
-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3.22)
- <성명>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4.3)

### 인권이야기

- 이주영 - '병' 보내고 약 보내지는 것인가(4.1)
- 김철준 -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4.8)
- 박영희 - 장애여성 선회의 4월(4.15)
- 이창호 -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4.22)
- 이주영 -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4.29)

### 인권정보자료

- 『애들아, 인권공부 하자』(4.4)
- 『에이즈는 없다 HIV/AIDS 가설의 옷 벗기』(4.11)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4.25)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설립 움직임...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없는 인권위원의 행보(4.2)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4.9)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4.16)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4.23)
- 인권위 전략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4.30)

### 연재 -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4.11)
-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4.12)
-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4.18)
- ⑥ 유엔인권위 난항 속 패악...정치 흥정 장소로 전략(끝)(4.29)

###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② 보호감호, 반군계층을 향한 닷(4.4)
- ③ 국가가 만들어내는 '되돌이표' 인생들(4.11)
-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4.18)
- ⑤ '고우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4.2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하는 문제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 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이래 줄곧 공석 상태에 있었던 비상임 인권위원직 하나가 주인을 찾게 됐다.

신임 이흥록 인권위원은 69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7-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재야 민주화 운동가로 활약했다. 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과 관련해 신군부에 의해 끌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이 위원은 81년 '부림사건', 83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대표적 시국사건뿐 아니라 영남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활발한 인권옹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부림사건'의 변론활동을 계기로 당시 후배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85년 5월 발족한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서도 노 대통령과 나란히 상임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이후 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평화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이 위원은 98년 6월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의 전신)를 탈당하기까지 정치활동에 주력했고, 탈당 이후에는 변호사 업무에 전념해 왔다. 현재 이 위원이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에는 이용철, 최은순, 이석범 변호사 등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인선경위에 대해 이 인권위원은 "20여 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정 사실을 알려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3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겨왔다"면서 "아직도 인권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2003년 5월 2일(금)

제 23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정도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착취요 인권탄압이라고 본다."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이제 막 임명장을 받은 상태라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기는 힘들다"면서도 "인권단체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소망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의 임명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들은 '인권옹호활동의 경력도 있고 인권개선의 의지도 갖춘 인물이 임명됐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또 다시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서 밀실인선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위기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활동가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참여정부' 하에서 인권단체들이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접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활동가는 "내정자가 인권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 노동절에 올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3만여 노동자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 대열 속에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지입 차주'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무려 7천여 명이 참가해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날 이들 노동자의 가슴에는 검은색 리본

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지난 27일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빛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송하역노조 포항지부 노조원 고 박성준 씨(34)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광양에서 올라온 한철희 씨는 "박성준 씨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찢어졌다"며 "그를 죽음으로 내몬 빛은 이 땅 화물노동자 모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씨 는 "1억에 달하는 차 한 대(※2면에 계속)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타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리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지난 해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성에 대한 긴급 타전을 바깥 세상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내에서도 현재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이다. 때문에 올해 사회보호법 개폐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용을 개선방안이 가중처벌을 확대하거나 보호감호소를 현재의 오지에서 도시 근교로 이전하는 등의 부분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공대위의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단순한 처우 개선으로는 보호감호제도가 갖고 있는 억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호법이 말하는 보호감호의 목적은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켜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사회 변호사는 "상습범이란 이유로 형이 끝난 후에도 시설 내에 격리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곤문제, 즉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가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단지 범죄

자들을 격리와 순화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범죄 유형은 빈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피감호자의 죄명별 비율을 보더라도 절도가 압도적인 점(2001년의 경우 76%)이나 대다수가 학력이 낮다는 점(무학 : 21.9%, 초졸 : 40.3%, 중졸 25.4%) 모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감호자의 절대 다수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은 보호감호제도가 없어지면 흉악범죄로 사회가 위협해질 것 이란 불안감도 사실상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유 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가 피감호자를 교육,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해 오히려 사회 적응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그 결과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감호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는 "소위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가 끝난 후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못 박는다. 박 변호사도 "범죄인에 대한 재사회화라는 목적은 현재의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유 활동가는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습범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빈부격차의 해소 등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주영]

(41면에서 이어짐) 를 빗을 내 구입하고 나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그 차 수명이 다할 때까지도 빗을 다 갖지 못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균 5천여 만원의 빗을 짊어지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90년대 중반 화물운송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차량을 강제로 불하시키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라는 이름 대신 지입차주가 된 화물노동자들은 "운임료에서 차량 할부금, 기름값, 차량 유지비용, 도로비를 빼고도 한 달에 25만원의 지입료와 100여 만원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빼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생활고와 빗 뿐"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운송업체에 등록된 차량들은 그 회사의 재산이 되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노동자들은 그대로 차량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동절에 울려 퍼진 이들 화물노동자들의 함성은 이러한 전근대적인 노예노동에 맞선 처절한 절규였다.

모성 보호는커녕 일방해고까지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을 돌려달라는 목소리는 또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들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구몬학습지 교사로 일하다 얼마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이은옥 씨의 사례는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에게 불어선 '개인사업주'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행진대열 속에서 만난 이 씨에 따르면, 사측은 출산 후 백일만에 복직한 이 씨에게 일방적으로 근무지역을 배정했다. 이 씨가 "출산 후라 그 지역을 모두 담당하기는 무리"라며 "지역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교사가 지역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면서 "일하든지 그만두든지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이 씨는 결국 해고됐다.

이은옥 씨는 "고용뿐 아니라 모성마저도 위협하는 이러한 사측의 횡포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관리를 철저히 받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법적으로 뗏뗏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특수고용노동자들, 113주년 세계노동절 행진대열 속에서 만난 그들은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하혜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3일(토)

제 23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국회 앞, 피학살 영혼 해원곳

###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촉구 농성 64일째 맞아

2일 저녁 6시, 뜨겁던 한낮의 아스팔트 열기가 길게 드리워진 건물 그늘에 덮여 한풀 켜이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된 영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든다. "예유, 억울하고 억울하다. 이 한을 어디다 푸냐! 예유 예유 양민 학살, 억울하게 돌아갔으니..." 대금, 피리, 장구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지면서, '민간인 피학살자를 위한 해원곳(서울 새남굿)'이 시작된 것이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투쟁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50년 전 학살된 100만 원혼을 위로하고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해원곳의 취지를 밝힌다. 고양금 정골공대위 이춘열 집행위원장은 "망자와 산 자가 함께 힘을 모아 위정자에게 통합특별법을 촉구하자"고 힘을 모은다. 현재 투쟁본부는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 64일째를 맞는 이날까지 국회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국관 앞에 풍성히 쌓인 제수 뒤로 저승을 관장하는 10대왕의 초상들이 나란히 서있고, 그 위로 빨강·초록·노랑·하양·파랑 등 오색 천이 나뭇줄기다. 서울 새남굿의 만신인 간우린 씨(서울 새남굿-중요 무형문화제 104호)는 10대왕들에게 구천지하를 떠돌고 있는 원혼들을 달래달라며 '중디빳산'이란 의례를 진행한다. 이어 머리 위로 큰머리를 쓰고 황금색 화려한 옷을 입은 뒤 국관을 빙빙 돌리며, 영혼들의 넋을 극락 세계로 인도한다. 영혼들을 모신 명석이 그 뒤를 따르고, 유족들도 영혼들의 뒤를 쫓는다. '도령'이라는 의례다.

곳이 진행되면서 억울한 혼들은 유족

들의 입으로 오열한다. 고양금정골에서 아버지를 잃은 서병규 금정골유족회 회장은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왜 죽어야 돼요? 억울해요!"라며 통곡한다. 충북 사리면 보도연맹 유족회 윤갑진 씨도 북받치는 설움을 참아낸다. 해원곳의 마지막은 '대가리기'. 만신은

무명과 베를 품으로 찢어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을 헤쳐준다. 이로써 억울함을 달래고 저승으로 인도된 영혼들은 이승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된다. 50여년 전의 강요된 죽음, 50여년 간의 강요된 침묵. 억울한 영혼의 넋은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겠지만, 유족들의 오열은 '대가리기'가 끝난 이후에도 그칠 줄을 모른다. 벌써 3번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통합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족들의 오열은 소리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 고통의 행진을 멈추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 [범용]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4월 28일 저녁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팔루자 마을, 한 무더기의 이라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군이 점령중인 학교를 향해 행진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학교에서 떠나 수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물 한 살의 아메드 카림은 한 영국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총알이었다. 죽은 사람은 최소 13명. 그 중 여섯이 열 살도 채 안된 어린이들이었다고 한다. 30일에도 같은 마을에서 미군의 총구는 불을 뿜었다. 이를 전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위군중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는 팔루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앞서 4월 15일과 16일,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도 미군은 이라크 민중들을 향해 발포를 했다. 미군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위권의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맨 몸의 이라크 민중들은 무장한 미군들을 '위협'한 대가로 싸늘한 죽음이 되었다. 이라크 민중들의 말할 권리, 모일 자유는 '해방자'를 자처한 미군에 의해 피범벅이 되고 만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4일 이라크 주둔 지상군 사령관은 "누구든 미국이 이끄는 권위에 도전하면 체포될 것"이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해방자'의 가면을 확실히 벗어 던졌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라크 민중들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해졌다. 얼마 전에는 이라크인 약탈 용의자 4명이 가슴에 '도둑'이란 글자를 새긴 채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중세 암흑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 야만적 형벌이 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점령군 미군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의 권리니 하는 것들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필요한 것인 것이다.

부시가 전쟁 종료와 미국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의 관심은 어느새 이라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로부터 아직 우리의 눈길을 거둘 때가 아니다. 공식적인 이라크 전쟁은 끝이 났지만,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사라진 그곳에서 이라크 민중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아니, 바로 말하자면 전쟁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과 기본권 압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건설현장이니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2002년 한해만 사망자가 6백67명, 부상자가 1만9천9백25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건설현장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1일 오후 1시, 노동자들의 축제인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던 대학로 거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아래 건설연맹)이 주최한 '건설현장 산재추방 결의대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다름 아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였다.

이러한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위령제'에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6백67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6백67명의 위패와 함께 음식이 차려지고, 망자들의 넋을 달래는 씻김굿이 벌어졌다. 죽은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망자들을 편안한 저승길로 인도한다는 씻김굿. '더 이상 죽지 말고, 해방세상 가세'라는 노랫가락에 굿판은 최고조를 이뤘고, 위령제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은 이름 없이 죽어간 동료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한편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와 산업안전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60여 점이 전시되고 있었다. 증장비에 치어 몸뚱이만 남은 사진, 추락사고로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든 사진, 압착사고로 사망한 사진 등은 노동절 집회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허술한 안전시설과 처참한 사고 사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통계로만 보더라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숫자는 1천9백40명. 한 해 평균 6~7백명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주들이 건설수주를 따내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60% 이상은 감춰지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1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

생률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설연맹의 설명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시설만 갖추어도 예방할 수 있는 원시적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부족할 터에 오히려 사업장 규제완

화로 안전관리자와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만 쫓기는 안전불감증에 노동자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여수의 울촌 산업단지에서 또다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령제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는 다음에야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냐"며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근예)

##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을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지난 3월 한 달 국내 상영작 공모기간 동안 모두 21편의 작품이 7회 인권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선정된 작품은 다큐멘터리 11편, 극영화 1편으로 올해도 역시 다큐멘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독립 다큐멘터리와 인권의 의종은 만남은 올해도 변함없이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대부분의 극영화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인권' 영화라 보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다.

선정된 유일한 극영화인 <여기가 끝이다>는 '탈북자들의 남한 적응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방인으로 취급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간결한 내러티브를 통해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는 인권영화제로선 '반가운 극영화'였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작품이 4편이나 출품되었다. 이중 지난해 맹렬했던 이동권 투쟁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버스를 타자>와 장애인 여성들의 독립 과정을 담은 <거북이 시스터즈>가 최종 선정되었다. <버스를 타자>가 이동권 투쟁의 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힘있는 작품이라면, <거북이 시스터즈>는 '어둠지 않은 장애인 영화의 미덕'을 보여주는 밝은 영화이다.

지난해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둘러싸고 붓물 터지기 시작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투쟁을 담은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는 '보호받아야 할 온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파견법 철폐'에 헌신한 주봉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필승>과 동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기나긴 정리해고 투쟁을 다룬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 역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최초 상영된다.

이외에도 제독학자 송두율 교수 이야기 <경계도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어두운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싼 <나와 부영이>,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했던 김종태 열사의 생전의 삶과 희망을 반추해 본 <김종태의 꿈>,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월드컵 열기와 대비시켜 본 <그들만의 월드컵>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었던 '인권다큐'들 대부분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작품 선정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주관했으며 스텝으로 일하는 자원활동가들의 의견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후보가 된다. 영화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폐막식(5월 28일)에서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7일(수)  
제 23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할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상범 위원장은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등 반민주 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 이 어려운 현대사가 바로 지금에 와서도 반민주·학살 세력이 득세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사회는 과거청산의 바탕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 추진과 의문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과 힘을 모아 반민주·학살가담 세력의 저항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모 민변 회장 역시 "이번 기회에 과거청산을 이루지 못한다면 계속 악몽처럼 따라다니며 우리 역사의 짐이 될 것"이라며 "과거청산이 될 때, 인권과 화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위원회 권한강화 △법 적용 범위 확대 △공소시효와 소

멸시효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영 변호사는 그간 위원회가 강제력이 없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제도와 청문회 개최 권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아니라 청문회 도입 등으로

##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의 협상에서 'CS 복귀 시 대학 수시 모집과 예산소요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3일 실무협의에서 전교조와 교육부는 CS 재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수시 모집과 관련해 교육부는 CS 재가동 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최대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기간이야 어찌됐든 교육부가 CS로도 수시 모집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시효를 정하는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변과 계승연대는 5월중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과거청산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없는 16대국회의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의문사법 개정이나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근예)

또, CS의 보안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향후 5년간 2조4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CS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시도교육청 별로 2명을 배치하는 안으로 9백 억이 소요된다고 맞섰다.

비록 이날 실무협의는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CS 재가동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NEIS 중단 불가론'이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적어도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NEIS 중단과 CS 재가동이 재정적·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가 CS 재가동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향후 NEIS 문제는 급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혜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뒤편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 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인권위의 판단은 NEIS 시행에 있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인권·사회단체와 전교조가 진정을 접수한 이래 약 3개월에 걸쳐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 달 8일에는 교육부와 교사·학부모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청문회를 개최해 NEIS를 둘러싼 대립된 쟁점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NEIS 문제를 2차례에 걸쳐 안전으로 상정하고서도 어떤 결정도 내놓지 못한 채 판단을 유보해왔다.

전국 수많은 학생·학부모의 인권문제가 걸린 사안인데도 교육부와 전교조·인권사회단체 간의 입장대립이 첨예한 만큼 NEIS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계속 판단을 미뤄오면서 교육부의 NEIS 강행과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동안 인권위가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러한 우려는 지난 28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교조 측에 쏟아낸 질문은 NEIS의 정보 집중과 인권침해에 대한 것보다는 "NEIS 운영 중단 시 수시 모집 및 대국민 서비스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되묻는 데

집중되었다.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있는 만큼, 인권위의 뒤편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 인권침해와는 거리가 먼 부수적인 행정의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나선 인권위원들의 태도는 인권의 원칙보다 현실적인 고려에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NEIS 찬반 진영의 팽팽한 대립 사이에서 눈치보기식 권고안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전원위원회에 참석했던 전교조는 NEIS 중단이 불려올 수 있는 행정 문제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으로도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사 NEIS 중단으로 인해 행정적인 불편함이 따른다 해도 인권위의 판단은 그것에 좌지우지되어선 안될 일이다. 행정편의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데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안이 민감할수록 인권위는 대립하는 입장을 조정하는 데 나설 것이 아니라 인권의 원칙 위에 보다 올곧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허혜영)

<기자의 눈>

###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또 밀실인선이야! 이젠 규탄하기도 지겹다."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의 밀실인선이 또다시 반복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허탈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곽노현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황태연 교수가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황 교수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으로 이홍록 변호사를 지명하는 과정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황 교수와 이 변호사의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 인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접근과 의견 개진 자체를 차단 당했다.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야 할 인물들이 철저히 권력기관의 밀실에서 인선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 딱이 상했건 상하지 않았건,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는 식이다.

민주당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특위 김학주 부위원장은 황 교수의 추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으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전 위원의 퇴진투쟁을 벌이던 올해 초에도 청와대는 류 위원의 인선과정을 묻는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밀실인선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원칙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안타깝게도 향후 밀실인선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밀실인선은 정말 관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권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범용)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팩스 로마나 사무국장

###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59차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첫 유엔 인권관련 회의로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력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서방과 비서방,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국익 논리에 의해 담보상태에 빠진 인권위에 참여정부가 당당한 외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의 성적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인권위 일정은 대개 장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연설과 의제별 발언, 결의안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중 정부 발언은 보통 쟁점이 되는 국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자국내의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나타난다.

의제별 발언을 보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관심사를 적당히 언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하거나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변명했다. 이는 인권후진국의 전형적인 행태일 뿐, 여기서 참여정부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권의 정치 도구화' 구태 못 벗어

인권외교에는 인권을 활용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현실정치와 외교를 이용해 인권을 증진시키는 인권정치 두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인권외교는 현실정치의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인권이야말로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라 미처 신경을 못 써서인지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만 두고 판단할 때, 낙제점수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 특히 아동권(의제 13) 관련 발언은 정말 함담미달에다가 미필적 고의라는 의혹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한국정부의 아동권 보고서에 대한 유엔 심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창피할 정도로 질책을 받은 것이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또 당시 정부 대표단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 증진을 위해 제시하는 권고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대신 엉뚱한 한일 교과서 문제가 발언에 등장했다. 아동권 심의 당시 '한국 아동권의 침해는 어른의 치매 때문'이라는 한 방청객의 지적이 다시금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감추기, 눈감기, 눈치보기의 삼중장태

한국정부가 보여준 결의안에 대한 입장도 문제투성이다. 반인권적 논리에 빚대어 이라크 문제에 관한 논의에 반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인권을 도구화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발언 내용과 표결 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제 6)과 관련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회의를 지지해놓고 표결에 가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에도 힘없는 작은 나라에 대한 결의안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문제에는 불참을, 체첸문제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정부의 표결 행태는 발전권과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나라별 인권결의안에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사형제도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라크 문제처럼 큰 국제적 쟁점이나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따랐다. 간단히 말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국익을 대원칙으로 삼을 때, 즉 국내인권문제는 감추기, 북한 인권문제는 눈감기, 그리고 외국의 인권문제는 눈치보기라는 세 가지 잣대를 쥘어서 사용한 셈이다.

인권외교, 열린 공간으로 나와야

올해는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0주년이 되는, 이른바 '비엔나+10'이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는 이에 관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도 별로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에서 재확인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국가들의 담합과 일부 국가들의 조직적 방해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9.11과 이라크 사태는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입지를 더욱 축소, 왜곡시켰다.

대다수 국제 인권단체들은 올해 인권위의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인권위 회원국의 하나인 한국정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비엔나+10'은 한국에게 '군사독재-10', 즉 형식적이거나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0년을 의미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이제는 눈치보기 주먹구구식 인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동안 국민은 물론 언론,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른 채, 일부 직업관료들이 자신들의 닫힌 사무실에서 판단한 국익에 의해 추진해왔던 인권외교를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인권의 원칙에 따른 인권외교가 어떤 것인지 토론해 보아야 한다.

전세계 수많은 인권피해자의 운명을 더 이상 소수 정부대표에게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된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 특히 인권외교에도 이제는 국민 참여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8일(목)

제 23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총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은 김영삼 정권 말기로 각종 비리와 대선자금 공개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된 돌과귀였음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련이 정치권과 공안세력의 희생양이 된 것”

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제시하자, 민주노동당 최규업 자주통일위원장은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참석해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공안논리로 일관된 답변을 내놓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

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밝힐 수는 없지만 한총련의 강령, 규약, 총 노선 등을 볼 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많고 북한과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안당국의 대응이 없었다면 한총련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생각해 보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북한은 50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고 여전히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수배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개별 사건별로 폭력행위자나 핵심주동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전 주장을 되풀이 해 새정부 하에서도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한총련 문제가 검찰의 구시대적 공안논리에 가로막혀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고근예)

##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 “무노조 신화,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단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삼성의 전근대적 노동탄압에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쾌의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이러한 삼성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가 바로 그것.

지난 2월 6일 설립된 삼성일반노조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삼성 계열사들과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합법 노조다. 하나의 재벌그룹을 상대로 일반노조가 설립된 것은 삼성일반노조가 처음이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성환 씨는 96년 11월 삼성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후 8년째 지난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0년 설립된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삼성의 악랄한 노동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데 앞장서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말 호텔신라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 불과 40분전, 다른 직원 명의로 설립 신고서가 제출되면서 노조 설립 시도가 좌초되는 등 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삼성의 치밀한 저지전략으로 번번이 실패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업 단위의 일반노조는 기업 내 자주적 노조 건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경우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만큼, 삼성의 탄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조합원들을 보호하기도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전국을 돌며 삼성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교육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노동자들의 경우,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다 설립 신고증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에게 삼성의 탄압과 회유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이 직면

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실체로 드러냄으로써 ‘삼성노동자들은 국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폭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 공장 노동자들의 경우 서울 변두리 영세 전자업체보다도 못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러나 노조가 없어 그러한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서 사내하

청 노동자로 전환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빛어지는 노동조건 후퇴에도 맞서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삼성에 대한 신화부터 깨야 삼성노동자들도 스스로 조직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현재 삼성일반노조는 주로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열악한 상태지만,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깨기 위한 의지만큼은 결연하다. 거리를 사무실 삼아 전 국토를 뛰어다니고 있는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 삼성 전담 부서를 만들어 조직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며 힘주어 말한다. (배경내)

##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브라질의 새로운 영화운동이었던 ‘시네마 노보’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시네마 노보’는 독립 제작, 비전문배우 기용,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현장촬영 등 다큐멘터리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극영화로 6,70년대 브라질의 영화 제작을 새롭게 꽃피운 실천이었다. 〈20년 후에〉는 이러한 영화사적 맥락에서 매우 흥미로운 영화이다.

1962년 감독 에두아르도 쿠치노는 당시 브라질에서 가장 큰 소작농민연맹이 결성돼 지주와 국가를 향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사페 지역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사페로 향한다. 그가 도착하기 2주전 사페에서는 농민 지도자 주앙 페드로 테시에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 감독은 주연배우로 시위대의 선봉에 서있던 주앙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첫 계약을 한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제작준비를 마치고 첫 촬영을 앞둔 1964년 1월, 사페에서는 농민과 경찰의 대규모 충돌로 1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 결국 제작은 중단된다.

그 후 제작진은 갈릴레오로 촬영지를 옮긴다. 갈릴레오는 1955년 결성된 농민연맹의 투쟁으로 자작 농민들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던 해방구와 같은 곳. 감독은 엘리자베스를 비롯해 그곳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투사들을 배우로 영화를 크랭크 인 한다. 그러나 촬영 시작 35일 만인 1964년 4월 1일, 쿠데타로 인한 민중운동 대탄압으로 엘리자베스와 농민운동 지도부, 스태프의 일부가 투옥되고 촬영은 대본의 40%만을 담은 채 중단된다. 1981년 감독은 20년 동안 간직해온 필름을 그의 배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갈릴레오를 찾는다. 영화는 극영화로 시작해 증언과 회상이 교차하는 기록영화로 변했다가 극과 사실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로 완성돼 있다.

한편 올해 영화제에는 〈철레전투〉로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보여주었던 파트리시오 구즈만의 〈피노체트 재판〉도 상영된다. 지난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된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 여부는 칠레 민중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감독은 피노체트의 학살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의 증언과 그의 기소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피노체트 철권 통치를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영화 〈피노체트의 아이들〉도 흥미를 끄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부모를 독재자 피노체트의 먹이로 빼앗긴 채 성장해 이후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던 세 주인공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한때 독재에 항거해 젊음을 불태운 이들은 이제 운동을 떠난 이른바 ‘칠레판 386세대’이다. 영화는 운동의 과거를 버리지도 풀어나가지도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담담하게 펼쳐보인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최근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 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의문사위가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한 이모 경장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의문사위는 당시 아파트 2층에서 경찰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신모 씨 등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 씨의 감정 소견을 주요 근거로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적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신모 씨가 수년 이 지나서야 목격 사실을 의문사위에 말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신모 씨는 나중의 진술이 처음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점 △7층 주민과 동료 경찰관들이 구타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으며, 내부 장기 손상의 발생 시차를 고려할 때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미야마 씨의 감정 소견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채택한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지난 6일 원심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광주고법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다. 의문사위는 항고장에서 △당시 추석을

2003년 5월 10일(토)

제 23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쇠러 광주에 잠시 들렀던 목격자 신모 씨가 자신해서 경찰의 구타 사실, 그것도 운동권 학생에 대한 구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새롭게 드러난 정황사실을 토대로 신문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신모 씨가 7회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또 김준배 씨(※2면에 계속)

###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사상전향제가 공식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며 6년제 학생 자주조직의 대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아 왔던 검찰이 이제는 합법화와 불기소 처리라는 달콤한 미끼로 한총련의 공개적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한총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 공개 간담회에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안논리를 내세우며 ‘노선, 강령 등에서 한총련의 변화가 없는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의 공개 선언’ 등을 구체적 예로 들며 사상전향의 내용까지 제시하는 ‘대담한’ 연사를 일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한총련이 자신의 주장과 노선을 검찰 나으리들과 수구·공안세력의 마음에 들게끔 바꾸어 진상할 때까지 한총련과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으름장에 다름 아니다.

검찰로 대표되는 수구 공안세력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민주집시’를 어지럽히는 ‘친북·좌경 폭력세력의 소탕’도, 한총련의 노선과 강령에서 북한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총련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변경함으로써 끝내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무력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패배주의를 만연케 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세력이 움틀 가능성 자체, 권력에 도전하는 ‘불온한’ 정신 그 자체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 요구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조직의 기본 주장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 역시 국가권력의 폭력임은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한총련에 대한 ‘권력의 포용’이 아니라, 사상과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중단이어야 한다.

##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수형자 일부가 매장된 곳을 발굴함에 따라 폭로됐다. 이로써 ‘한국전쟁 직후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자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학살지 발굴은 최근 투쟁본부가 당시 수형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데 강제 동원된 이모 씨 등 주민 2명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당시 김천시 구성면 돌고개 계곡에서 벌어진 학살 현장에 강제 동원되었던 이들은 “국군은 돌고개 아랫마을 주민 4-5명을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수인복에 삭발을 한 수형자 60여명을 그 구덩이 주변에 서게 한 후, 뒤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동원된 마을 주민들에게 매장하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 지난 8일 투쟁본부는 돌고개 계곡에서 매장지로 추정되는 5곳을 수색, 이 가운데 1곳에서 탄피 3개, 신발 1족, 단추 1개 및 두개골 등의 유골을 수습했다. 이어 9일에는 공개 발굴을 실시해 조각난 두개골과 다리뼈, 턱뼈를 비롯해 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탄피와 탄두 등 수십 점을 추가 수습했다.

투쟁본부 이창수 상황실장은 “이번 발굴로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그들을 인근 형무소로 이감했다는 법무부 등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발굴의 의의를 지적했다. 이 상황실장은 또 “당시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4.3관련 기결수들의 실종건이 국가차원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했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 그들이 집단학살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전과 전

주 형무소에 뒤이어 김천형무소의 학살지까지 발견됨에 따라 전쟁 발발 초기 20여 개의 형무소에 구금돼 있던 수형자들이 실제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을 개연성도 더욱 높아졌다.

한편, 9일 발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투쟁본부는 “주민들의 증언과 당시 기록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김천형무소에는 제주 4.3사건 및 여순사건 관련자 등 1천여 명과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상당수가 구금되어 있었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이들이 1950년 7월 10일에서 28일 사이 국군에 의해 몇 차례에 걸쳐 여러 곳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는 기존의 진술과 자료들이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1989년 발간된 『김천시지』(이근구 편지)에서 “김창룡 당시 육군 정보국 제4과장이 보도연맹원과 수형자들의 학살을 직접 지휘했다”고 기록한 바와 일치한다.

현장 보전을 위해 발굴작업을 중단한 투쟁본부는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장지 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허혜영)

(※1면에서 이어짐)의 주된 사망원인이 추락 후 가해진 폭행이 아니었다더라도, 김 씨가 추락 후 생존하고 있었으며 폭행이 가해진 사실도 명확한 만큼 이모 경장의 폭행이 김 씨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아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기 힘든 7층 주민과 진술을 자주 번복한 동료 경찰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면서도, 당시 2층에서 상황을 정확히 목격했고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는 신모 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이번 기각결정이 검찰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단체연대회의 역시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준배 독직폭행치사 사건의 진실은 수사권도 없는 의문사위가 맨주먹으로 얻어낸 결실이었다”며 결정적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배경내)

### 김준배 씨 폭행치사사건 관련 주요 일지

- △1997.9.15 : 수배상태에 있던 김준배 씨, 밤 10시 40분경 경찰 체포를 피하고 자 은신중인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지면에서 약 3-4m 지점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짐. 이튿날 00:33분경 사망
- △1997.9.17 : 광주지검, 부검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하루만에 ‘단순 추락사’로 내사 종결 처리
- △2001.9.3 : 의문사위, 검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해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 발표
- △2002.7.9 : 의문사위, 추락과 이후 이모 경장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 당시 화단에 쓰러져있던 김 씨를 발견한 이모 경장이 수차례 발로 밟고 몽둥이(혹은 경찰봉)로 수차례 가격해 심장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모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결정
- △2002.7.16 : 의문사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프락치로 동원됐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 은닉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던 사실 폭로
- △2002.8.2 : 의문사위, 광주지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이모 경장 고발
- △2002.12.30 : 광주지검, 이모 경장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
- △2003.1.16 : 의문사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
- △2003.4.30 : 광주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배라"

###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전/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전/입·진학 3개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 내 병역(미필 사유), 혈액형, 정당, 사회단체 활동 등에 관한 27개 세부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기존 학교별 정보시스템(CS)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의적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비록 'NEIS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집중돼 있는 영역들을 NEI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권고는 막대한 재정이 걸린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의 안을 수용할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인권기준에 원칙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NEIS의 교무·학사/보전/입·진학 영역은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17조의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S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현실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현실적인 면이 어떻게 감안되었는지는 이번 주 내 발표될 결정문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교무·학사 영역 중 8개 세부항목만 삭제하는 교육부안과 교무·학사/보전/입·진학 영역을 모두 삭제하는 전교조안, 그리고 교무학사/보전/입·진학 영역을 삭제하되 성적·출결 항목에 한해서만 NEIS에 입력하는 절충안 등이 올라왔으나 모두 기각되고, 이번 안이 전격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사회단체들, "소신 결정 환영"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이번 권고가 NEIS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여러 정보화 정책에도 쐬기를 박는 계기가 될

2003년 5월 13일(화)

제 23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번 결정으로 NEIS의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해도, NEIS에 의해 학교의 모든 행정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교육이 획일적으로 규제되는 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앞으로 NEIS에 의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재량권이 침해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역시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 "더 이상 NEIS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육부 일방행정 반성 계기 돼야

한편,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NEIS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엄청난 예산비와 학교현장의 갈등을 초래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비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중고등학교연합 박성기 씨는 "NEIS 문제로 인해 그 동안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해온 교육부 행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개인정보의 집중이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임을 재확인한 판단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모든 관심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교육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에 주목되고 있다. (허혜영)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 인권의 감수성

충북도경에 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다가 덧붙인 에피소드가 있다. 큰 딸 목인이의 이야기다. '인권의 감수성'에 관한 적합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목인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학교에 대해 정말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제출하게 하고, 그 편지를 모아서 부모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부모에게 편지를 꼭 쓰게 하려는 뜻으로 이해하고 목인이가 별 거부감 없이 아빠인 나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에 제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편지를 잘 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학생들이 제출한 편지를 모두 뜯어본 것이다. 목인이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보느냐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났다. 중3이면 이미 다 큰 아이인데 무슨 편지 검사를 한단 말인가. 참 한심한 발상이다. 나도 맘 한구석에 켜기는 게 있었다. 목인이가 요즘 사춘기라서 칼 같이 예민해져 있고, 나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아서 편지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내 프라이버시도 침해한 것이다.

학교장은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선생이 학생을 교육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 나쁜 의도로 편지를 뜯어보겠느냐. 학생들의 속내를 잘 알아야 제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생이 학생들의 글을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누구에게 유출하겠느냐.

나는 경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고 물어 보았다. 이런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결국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감수성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또한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네이스(NEIS)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명백한 네이스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뽀뽀 웃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의 인권교육은 이렇게 정리했다. '인권운동은 인권의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학교당국과 교육당국의 시각을 바꿔나가기 위한 싸움도 그 하나이다. 따라서 나는 편지를 뜯어보는 학교당국의 소행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항의하겠다.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건의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활동가는 바로 이런 인권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교육을 끝맺었다.

나는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이 녀의 학교를, 이 나쁜 교장선생을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 분을 삭히지 못하면서... (김철준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1.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경적 뺏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7천여 조합원, 과천 정부청사 앞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지입제 폐지·경유가 등 직접비용 인하·노동3권 보장 등 촉구(4.30) /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 전국 확산...포항 이어 경인·경남·전남지역 등 가세(5.6) / 화물연대 포함지부, 9개 운송업체와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광주·전남지부 협상 마무리(5.9) /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 돌입...운송하역노조, 정부와의 교섭 상황 따라 13일 총파업 예고(5.11)

2. "한총련 공안사냥은 꼭~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양심수 1424명 사면·복권...16개 인권단체, 선별사면 규탄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과 정치 수배해제 촉구(4.29) / 경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전 경기대 총학생회장 박제민 씨 검거(4.30) / 민변, 한총련문제 해결 위한 공개간담회 개최...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5.7)

3. 제국주의자들의 닳은 굴  
미군, 바그다드 민간인 시위대에 총격...어린이 6명 포함 80여명 사상(4.28) / 미군, 이라크 팔루자에서 반미 시위대에 총격 20여명 사상(4.30)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두 살배기 어린이 포함해 80여명 사상(5.1) /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찾는 데 실패했음을 시인(5.4) / 미 상원 군사위, 소형핵무기 금지법 폐지 결정(5.10)

4. 기타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4.29) / 국회, 황태연 씨 사상·이념 편향 트집잡아 인권위원회 선출안 무결(4.29) / 광주교법,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4.30) / 불교신자 김도형 씨, 병역거부 선언...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4.30) / 대통령 지명 새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 임명...인권단체,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 밀실인선 되풀이 문제"(5.1) /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키로(5.1) / 민주노총·한국노총, 113주년 노동절 맞아 대규모 집회와 기념행사 열어...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촉구(5.1) / 서울지법, 제자 성희롱 교수에 1천만원 배상 판결(5.5) / 민변·민주화운동성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위 2기 활동 앞두고 의문사특별법 개정 공청회 열어(5.6)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국군에 의한 조직적 집단학살 있었다고 밝혀...매장 동원된 주민 증언 통해 현장서 유골·탄피 등 발굴(5.9)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팩스 로마나 사무국장

###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0주년인 올해는 한국의 인권외교 10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국내화와 '국내의 인권개선을 토대로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세계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한국의 인권외교를 현실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제는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쌍방향 접근은 이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동시 접근해야 한다. 하드웨어가 구조와 제도라면, 소프트웨어는 문화와 사람이다. 제도개선과 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아래는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다.

#### 1. 중장기적 국가행동계획 수립

무엇보다 인권선진국의 비전, 과제,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5대차별 개선방안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선진국의 주춧돌을 놓는 이 건축설계도 작성 작업은 일부 부처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다툼이 아닌,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민 참여의 상황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정부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고 유엔 인권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활용

인권은 법과 정치의 두 바퀴로 발전해 간다. 인권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유엔이 설정한 국제인권기준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상시초청장'을 하루빨리 제출해 이들의 지원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행동계획 수립 과정에는 지금까지 유엔의 6대 인권조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시한 권고 내용의 국내적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하루빨리 국제인권조약 비준시 유보했던 조항들을 철회해야 한다.

#### 3. 인권전문 외교관의 양성

인권외교의 쌍방향 전략을 위해서는 국내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지식과 인권감수성으로 무장된 인권전문 외교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외교통상부에는 인권전문가로 인정받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일반 외교·통상업무를 하다 자리가 없거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발령이 나면 인권업무를 다루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인권위 위원국 경력 10년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자체의 힘으로 내용 있는 결의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제는 준비된 외교관에 게 인권외교의 임무를 맡겨야 한다.

#### 4. 인권외교에 국민참여의 제도화

'참여정부'의 국민참여 원칙은 인권외교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인권위 전후로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인권학자를 초청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따른 국익이 무엇인지, 한국이 세계인권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권위 전후로 자국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를 적극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진 유

럽에선 당연한 일로 자리잡았다.

#### 5. 유엔인권기구 진출 한국 위원 공청회

유엔인권기구 공직에 출마하는 한국인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른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좁은 의미의 국익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그 동안 검증절차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천된 한국 위원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추천한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 6. 청와대에 인권전담 비서관 신설

인권외교는 성격상 여러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인권외교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직접 다루어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힘있는 기관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외교에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외교통상부도 여전히 인권을 국익, 즉 안보와 통상 이익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정치경제 안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때 의미있고, 인권은 그러한 참된 정치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사업을 추진, 감독, 조정할 인권전담 (수석)비서관을 청와대 내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실험적인 성격을 지녔던 인권대사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14일(수)

제 23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의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10기(한총련) 역시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10기 한총련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피고인이 구속된 뒤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기 한총련은 이적규정의 핵심 근거가 됐던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개정하고 여성·장애인 등의 인권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종전과 같은 판결을 되풀이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북한이 더 이상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하에 북한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한총련의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2면에 계속)

##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강금실 법무부장관 면담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준비해볼 계획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대표들과 만나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공대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김용수 공대위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찬운 집행위원장과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공대위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현정 보호과장은 "보호감호제도가 나름대로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단번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개선은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용수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있는 보호감

호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20년 전의 과오를 이제는 바로 세울 때"라며 보호감호제 폐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공대위측 주장에 대해 김 보호과장은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선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정말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한다면 폐지라도 갈 수 있다"라며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의 보호감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인권단체와 학계 등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 장관 역시 청송보호감호소에 내려가 피감호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논의를) 자유롭게 오 픈해 놓고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며 "청송에도 내려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인 과정'을 약속한 강 장관이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청송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재소자 징벌 받다 스스로 목 매

사건은 1일 새벽 안동교도소에서 발생했다. 30일 소란, 자해 등의 이유로 징벌위원회에서 40일 간의 금지 징벌을 부과받은 서모(37) 씨가 다음날인 1일 새벽 3시경 징벌방에서 내의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것. 3시 40분경 사찰을 돌던 교도관이 서 씨를 발견했을 때 서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1차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측은 "모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징벌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서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서 씨의 형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경을 바꿀 수 있게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모든 게 꿈만 같다.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징벌에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

서 씨가 징벌방에서 자살하자, 29일 면전 진정 조사차 서 씨를 면담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급히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수명 조사관은 "29일 면담은 서 씨가 서신문제와 관련해 교도관과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진정해움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30일 징벌이 부과된 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 조사관은 "29일 서 씨를 면담했던 조사관으로부터 면담 당시 서 씨의 표정이 매우 밝았으며, 다음날 열릴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들었다"

며 "몇 가지 의혹은 있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서 씨의 자살은 순간적인 울분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망하기 보름 전쯤 교도관과의 다툼이 있자 절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자해를 시도한 사실과 서 씨와 함께 생활한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취합해 볼 때 자살의 징후 등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과도하고 부당한 징벌, 자살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징벌'에 있다. 우선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다. 이상희 변호사는 "재소자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절망감, 교도소 및 동료와의 부적응,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으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자해 또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며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징벌과정의 불공정성과 불복제도의 미비다. 규정상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 회장이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를 개최, 협의가 있는 재소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징벌이 소추 혹은 교도관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징벌위원회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재소자의 소명 절차 역시 '출석'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징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어 징벌 결정에 대한 재소자의 반발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징벌요건의 모호성과 징벌의 내용, 징벌 결정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도 큰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지 징벌이 부과된다. 금

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간사는 "비좁고 열악한 징벌실 구조와 극단적인 기본권 제한 등이 맞물려 재소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금지된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고통스런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개선책 마련 기대

제2, 제3의 서 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징벌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 법무부에 정책권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혜정]

(=이면에서 계속)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여전히 냉전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데서 나온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 사회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그러한 위험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한총련을 다시 한번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질식사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최초의 대법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10기 한총련 관련 미결수들의 재판이나 수배 해제 등의 현안에 끼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공안세력들이나 수구 보수언론들이 다시 한총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총련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내)

●알림: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오늘 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15일(목)

제 23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동성애자' 지목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과 보도가 또 다시 동성애자 전체를 '위험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아래 보건원)은 수혈로 인해 2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건원은 에이즈에 감염된 헌혈자 'L'씨가 헌혈을 하던 당시에는 에이즈 감염 초기여서 헌혈 에이즈 검사로는 감염자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덧붙여 "L씨가 동성연애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원은 헌혈 혈액 검사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혈액관리의 안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고, 언론들도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혈액검사의 허점에 불구,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 보건당국을 비판하기보다 은연중에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을 연관시킴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

대표적으로 <한겨레>는 "지금까지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이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동성애자들이 헌혈한 피를 수혈받은 것"이라며 동성애자를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의 주범으로 몰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는 95년 이전에 감염된 10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본지 확인 결과, 보건원의 합일우 에이즈 담당자는 "나머지 10명이 동성애자의 헌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또 같은 기사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일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성 접촉을 하고서는 며칠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확인 결과,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사는 "이 분석은 공식적인 통계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분석처럼 설령 헌혈을 통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또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을 대표는 "현재 에이즈 검사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감염자임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그들만을 탓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가 에이즈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자를 에이즈

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은 동성애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기사도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이 사건을 동성애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기사는 "보건원이 L씨가 과거 헌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동성연애를 하기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동성연애 이전과 이후를 구분, "동성애=에이즈 감염"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도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에이즈 감염 경로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사는 동성애가 곧 에이즈 감염을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든다"며 우려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은 인권적 감수성을 길러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이번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고근예]

## 만화 사랑방

이동수





###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한 국내 사이트가 개설됐다.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기치 아래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평화권 모임' 사이트(peace.net.jinbo.net)가 바로 그것.

사이트는 이라크전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한 달여 동안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를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민간인들이 당한 피해 유형을 △공습 △사살 △불발탄 및 폭탄 △기타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채 10살도 안된 이라크 소년들이 미군에 의해 사살된 사례, 민간인을 방패삼아 미군이 이라크군과 교전을 치른 사례,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한 사례, 불발탄 집속탄을 갖고 놀다 10살짜리 소년에게 다친 사례

등을 통해 사이트는 이라크에서 저질러진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다.

사이트를 만든 '평화권 모임'은 이라크전을 계기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4월초 결성됐다. 모임은 국내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아랍권 언론을 포함해 외신에 의해 간헐적으로 보도되었거나 국제 인권·평화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는 민간인 피해 사례를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큰 틀로 묶어 일일이 번역, 정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상용 활동가는 또 "이 작업이 향후 인권과 평화의 이론적·실천적 만남을 위한

평화권 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작은 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임은 조만간 중군기자나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했던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민중들의 증언을 채집한 자료도 번역, 소개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자료들은 6월초 분석·해설 글과 함께 소책자로 묶여 보고대회를 통해 미국의 전쟁범죄를 환기시키는 데 쓰이게 된다. (배경내)

###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반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14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이미 NEIS 강행을 결정한 바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우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애초 NEIS 강행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산하 심의기구로, 이에 반발한 관련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데다 인권위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기구"라고 지적하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권고이행을 미루며 '학사차질'을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CS를 재가동해도 수시 모집에 차질이 없고, 교육부의 주장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혜영)

###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않는 전쟁', <선택>

#### 간헐 삶 사실적으로 재현...인권영화제 개막작 선정

인권영화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화제의 첫 날밤 스크린을 밝혀줄 개막작은 흥기선 감독의 영화 <선택>이다. 지난 95년 45년만에 출옥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의 삶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흥 감독의 두 번째 장편 극영화다. 80년대 대학시절부터 영화운동을 주도해 온 흥 감독은 독립영화제작집단인 장산곶에서 <단한 교문을 열며>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가 메가폰을 잡은 첫 영화는 92년, 현대판 노예선이라고 불리는 명탕구리배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이다.

그 후 영화 <선택>이 나오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인권영화제의 관객으로 자주 얼굴을 보이기도 한 그는 97년 이미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소재가 너무 "빨간"이라는 이유로 총무로의 제작사들로부터 퇴짜를 맞기 일쑤였던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은 그 자체가 투쟁이었다. 장선우, 박광수 등 상업영화 속으로 빨라져 흩어져 버린 '80년대 새로운 영화 운동의 기수'들 가운데 오직 흥기선 감독만이 영화운동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고 그 결실이 바로 <선택>이 됐다.

주인공인 김선명 씨는 인민군으로 유엔군에 생포돼 복역하다 53년 간첩혐의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수로 감형돼 평생을 갇혀 살아온 그는 남한정권이 저지른 야만을 전 세계에 고발한 양심수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었다. 영화는 45년 감옥살이 중에서 특히 1970년대 극약했던 전향공작에 초점을 맞춘다. 살인적인 고문과 가족을 동원한 회유에 무릎 꿇고 김선명의 동지들은 하나 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향 각서'라는 종이 한 장과 맞바꾼다. 김선명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견뎌야 했던 이 고통은 바깥 세상은 모르게 치러야 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다.

카메라는 철저히 차단된 감옥 안의 삶을 냉정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일 없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을 그려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16일(금)

제 23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15일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을 주제로 한 올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서 '학살행위와 병역거부자 인권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국,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15일 오후 1시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 모인 병역거부자들은 손목에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손수건을 매고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과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의 고통을 알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행동을 주관한 병역거부자들의 모임 '전쟁 없는 세상'의 나동혁 씨는 "현재 이스라엘에는 20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돼 있고, 이 가운데 8번 이상 수감된 사람들도 있다" 비판하고,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운동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에 반대하는 저항행동으로서 병역거부자 수는 1987년과 2000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봉기를 전후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살행위 중단 요구와 병역거부 인정 요구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참석한 사회당 신석준 대표는 "48년이래 75만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얼마 전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에게 총을 난사하고, 팔레스타인 거주지 파괴에 저항하는 국제평화운동가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는 전세계 민중이 그러한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해방연대 바람 씨도 "여성도 징집하는 이스라엘은 전세계에서 대규모 여성 병역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정부는 양심위원회를 두어 병역면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양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알고 있다 해도 매우 치욕적인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람 씨는 또 "군대 없는 사회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단은 학살행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기 위해 이스라엘 대사관을 방문했으나, 대사관측은 경찰력을 동원해 항의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2년부터 매년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로 이어져왔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탄압과 학살행위 규탄을 주제로 국제연대행동이 조직돼 지난 9일부터 이스라엘에는 전세계 병역거부자들이 모여 국제회의와 다양한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예비병역거부자인 은국 씨와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씨가 현지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이러한 국제연대행동에 동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허혜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폭풍 속의 비행, 여성장애인의 삶

-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지은이: Michelle Fine 외/ 옮긴이: 김치은 외/ 펴낸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년

1994년 겨울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란 여성장애인 모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연구결과나 기록물, 이론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장애인의 생활사(生活史)를 심도있게 다룬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여성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외국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러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책을 읽다보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정신분석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지, 한 사회의 문화가 여성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어떤 장벽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회적 다수자들이 내뿜는 폭력 앞에 슬직·담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여성장애인에게 삶이란 마치 '폭풍 속의 비행'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다름을 은폐하지 않고 그것이 존중되는 고리를 담금질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힘찬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다. (최은아)



# 아체의 핏빛 역사, 또다시 재현되나

## 인도네시아 군부,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26년만에 찾아온 아체의 '평화의 봄'에 또다시 차가운 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의 무장독립운동을 완전 소탕하기 위해 또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

지난해 12월 9일 제네바 주재 국제인권단체인 앙리 뒤낭 센터의 중재로 정부와 분리독립운동 세력인 자유아체운동(GAM) 사이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분쟁과 학살의 섬' 아체에 평화의 기운이 움틀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당시 휴전협정에는 아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군 철수 △자유아체운동의 무장해제 △과거 인권침해 조사 등이 규정됐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후에도 유혈사태는 끊이지 않았고, 양측의 무장해제는 물론 인권침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만해도 유혈사태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휴전협정은 사실상 남마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

그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수실로 방방 보안장관은 잇따른 유혈사태의 책임을 자유아체운동에 돌리는 비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25일 열린 예정이었던 평화협상도 철회시켰다. 뒤이어 2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유아체운동에 2주 내에 무장해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제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후 통첩 시한이 만료된 12일까지 자유아체운동의 무장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로 4천여명의 병력을 증파하고 주변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등 속속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유아체운동의 지도부 역시 유혈사태의 책임은 정부군에 있다고 맞비난하면서 방어태세를 당길 준비에 들어갔다. 교전이 임박하자, 12일 50명의 국제 평화감시단도 아체에서 철수했고, 주민들도 집을 꾸리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유혈사태가 휴전협정을 무산시키려는 정부군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부가 아체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지난 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상실한 권력을 되찾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근 브뤼셀 주재 국제위기그룹(ICG)이 지난해 10월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제마 이슬라미야(JI)와 군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반 테러리즘'과 '국토 통일'을 명분으로 군부가 영향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잔혹한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32년간 떠받쳐 왔던 군부가 아체에 군사조치를 감행하고 인도네시아 전체에 그 영향력

을 확대할 경우, 아체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인권은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51년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된 아체에서는 76년부터 지속돼 온 분쟁으로 최소 1만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강간, 고문 등 광범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대부분의 인권침해는 군부가 아체를 점령, 반군소탕작전을 펼친 89년~99년에 집중돼 있다. 더구나 군부는 아체에서 천연가스 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엑손 모빌에 보안군을 제공하며 대가로 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무기거래는 물론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벌목 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큰 인권제약을 불러올 것이다. [배경내]

###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지난 10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 역 계단에서 또다시 벌어진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15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항의서한을 전달기 위해 서울시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측이 "대표자 출입만 허용하겠다"며 철문을 굳게 닫아 버리면서 이날 방문은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10일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사고를 당한 이규식 씨는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과 시민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전동스쿠터의 과중한 무게로 계단에서 떨어졌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항의 집회에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리프트가 고장 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시민까지 도와 준 것"이라며 "무거운 스쿠터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장애인이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도시철도공사가 도리어 '기계가 고장 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고장나도 이처럼 답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답십리 역의 도시철도공사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의 손을 빌어 계단으로 이동했던 장애인들은 1년이 지난 이날 항의방문에도 공익요원들의 손에 의해 이동해야 했다.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는 "지하철역의 높은 계단을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질 때, 장애인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님은 과연 아냐"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이동권연대는 도시철도공사 철문 안쪽에서 밖을 지켜보는 직원들을 향해 항의서한을 던져 놓고, "도시철도공사의 답변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권연대는 오는 19일 1시, 발산역 리프트 사고 1주기를 맞아 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고근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17일(토)  
제 23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현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현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현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위의 두 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직권중재제도란 병원, 방송, 가스,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들 노동자들은 15 일간의 중재기간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이후 중재 재정(裁定)이 내려지면 쟁의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해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현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

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을 부정했다.

반면, 한대현 등 4인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중재회부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일률적으로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

법목적상 규제하고자 하였던 필수공익사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현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르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재의 보수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2면에 계속)

###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지난달 30일 국회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의 세우는 일이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런 국민적 지지는 3차 법개정으로 이어져 2기 위원회는 30건의 진상규명불능 사건과 기각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재조사하기로 결정하는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2기 위원회의 앞날이 순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가 제기한 김준배 씨 사망사건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은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사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탄압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기무사 등은 여전히 문서고를 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참고인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진술들을 모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외에도 보수언론, 과거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 정부기관들도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회유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이런 도전과 한계들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 길은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규명의 길이다.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지지를 업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게 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과거 청산의 새 길을 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만을 세우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2기 의문사위원회가 그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상중계>

#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유혜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진수명 국가인권위 조서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감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대한 주제에 비해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의 주요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지추진을 위한 처우 활성화 방안" :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종래의 교정교화가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맞춤형 처우'와 직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여금의 현실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용자의 적성·능력·의사에 따른 직업 지정과 전업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 이상희, "수용자의 규율 및 징벌, 불복제도" : 징벌이 질서 유지보다는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있다. △요건의 모호성 △절차 및 결정의 불공정성 △수용자 불복제도의 미비 △조사 및 금지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의 권리구제제도인 소장 면담, 순회점검 공무원·법무부 장관 청원 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 허주욱, "교정공무원의 지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향" : 교정공무원의 지위보장을 위해서는 '교정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교도관을 배출할 수 있는

교정연수원을 신설하고 교정공무원법을 제정해 이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금지되어야 한다.

■ 이호중(토론) : 교정행형은 수용자 개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형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현 행형법은 수용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설 관리·운영에 너무 치우쳐있고, 소장의 재량권이 너무 방대해 수용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유혜정(토론) : 행형개혁의 전제는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감시·참여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3자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3자 위원회는 교정문제만을 특화해 다루는 기관으로 수용자들의 구제요청을 심사·해결하고 교정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의 노조 결성도 필요하다. 유럽의 행형 개혁은 교정시설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도관들의 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정시설 내부로부터 개혁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형개혁은 불가능하다.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신장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노조를 통해 교도관들의 처우를 실질화해야 한다.

■ 김진숙(토론) : '여성 수용자'가 4.2%밖에 안돼 이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미흡하다. 특히 여성 수용자는 '취사' 작업밖에 할 수 없어 능력도 떨어지고 배움의 기회도 부족하다.

■ 진수명(토론) : 처우의 내용과 목적이 상이한 개방교도소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행형법이 적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아직도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분류처우표에 제보, 품보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 유병철(지정토론) :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징벌을 가하는 것은 아

니다. 문제는 고지된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들에게 있다. 심지어 독거수용을 바라거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징벌을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 상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낮다.

■ 남상오(안양교도소 조서관장, 객석 발언) : 현재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시설과 과밀수용, 타조직과의 갈등 등에서 파생되는데도 매년 교도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환자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청구해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노역수로 인한 과밀수용과 높은 발병률의 문제 등이 있다.

■ 김기현(광주교도소 서무과장, 객석 발언) : 인권만 강조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다. 교도관을 음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허위 진정한 수용자에 대해 형사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달라. 수용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의원들이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의료인력 확보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 감금실(법무장관, 인사말과 폐회사) : '인권'에 대한 교도관들의 반감이 너무 거센데, 인권은 교도관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정혁신기확단 등을 만들어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불시에 교도소를 자주 방문하고 일선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 (정리: 유혜정)

(☞1면에서 이어짐)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로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가 쟁의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쟁의권의 전면 박탈을 인정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0일(화)

제 23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19일 오후 산하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차관, 아래 교육정보위) 회의를 열어 NEIS 강행 결정 의견을 얻어냈다.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CS 사용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인권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을 NEIS로 그대로 시행하는 한편, 보건영역에 대해서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에 대해 진보네트워킹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교무·학사 영역은 부적응자 관리, 담임상담 누가기록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

NEIS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무·학사영역을 그대로 NEIS로 운영한다면 인권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기만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위는 교육부에 의해 편파적으로 구성된 '거수기'에 불과하며, NEIS에 관한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교육·인권단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정보위 회의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보위는 교육부 관료들과 NEIS 강행에 찬성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보위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기만적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려진 인권위 권고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내포돼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그 동안 교육정보위의 편파적 구성에 반발해 회의 참가를 거부해 왔던 이은우 변호사,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교육정보위 위원 4인도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고 "교육정보위가 NEIS에 대한 자료 검토도 없이 단 두 세 시간의 회의로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인권위 결정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교육정보위의 즉각 해산과 함께 교육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28일 조합원 연가투쟁

한편, 갈수록 거세어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런 절차가 모두 NEIS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19일까지 벌인 찬반투표 결과 오는 28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배경내)

### 인권영화제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전 작품을 무료 상영합니다. 지난 7년간 인권영화제가 이처럼 함께 나누는 정신을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자원활동가들과 썸짓돈을 끌러주신 후원회원들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세요.

- 후원회비 10,000원 해설책자 증정
- 20,000원 기념 티셔츠와 해설책자 증정
- 100,000원 7회 신작 비디오 3편(마이 테러리스트/ 파워 앤 테러/ 감춰진 전쟁)과 해설책자 증정

후원계좌와 상영작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www.sarangbang.or.kr/hrfilm 참조

19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 맞아, 중증장애인 30여명 등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접거하고 책임 인정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농성!!!



###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15일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했다.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장애인 전용택시는 나의 출발지 주변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분주한 마음으로 무조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난 10일 이규식(뇌성마비 지체1급) 씨가 동대문운동장에서 리프트가 고장나 역무원과 공익요원들과 행인의 도움으로 들러 내려오다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에 가는 이유는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먼저 답십리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내가 가겠다고 하자, 역무원은 수화기를 들고 말이 없었다. 답십리역 승강장에 내려 다시 전화하자, 잠시 후 공익요원이 다섯 정도 나왔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야, 네가 업고 가고, 우리 휠체어를 들고 가면 되겠다"라고 한다. 무수한 계단을 보며 나의 몸은 긴장되어 오기 시작했다.

무척 더워서 얇은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업혀간다는 것에 부담감이 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잠깐만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죠? 나는 업혀 가는 것보다 휠체어 채로 들러가야겠어요"라고 했다. 나의 생명을 다섯 사람들의 손에 맡긴 상태로 앞으로 금방 추락할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휠체어를 부여잡은 손에 땀이 고인다.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치게 되면...' 이런 끔찍한 공포의 시간은 긴 계단과 비례한다. 이동할 때마다 일상처럼 경험하고 있지만, 언제나 극복(?)되지 않는 공포다.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무수한 계단 앞에서 여성임을 포기하고 업혀거나 안겨야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들러져야 한다. 이러한 공포스러움이 싫다면,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만들어주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행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아무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 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내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적인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에게 이 사회는 한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마네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억압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규식 씨 추락사건에 대한 향의 방문에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문을 굳게 닫고 공익요원들을 앞세워 놓은 채,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또 한 사건을 유발시켰다. 14일 부천 송내역에서 장영섭(1급 시각장애인) 씨가 지하철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1. 교육부 말 바꾸기, 부끄럽지도 않나?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권고 존중 뜻 밝혀(5.12) / 교육부, 학사일정 차질 등 이유로 20일째 수용 여부 결정키로(5.13) / 교육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연 뒤 20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5.15) /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쟁 진행(5.16~19) /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면 업무 거부하겠다고 밝혀(5.17) / 62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5.19)

2. 굶신거리며 한반도 전쟁까지도 허용하려나...  
방미 중 노 대통령, 자신은 반미주의자 아니라는 해명성 발언 거듭 내놓아(5.12) / 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만나 "이라크 사태 관련 유엔 안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 사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며 미국 편들어(5.13) /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평화적 수단 통해 해결하되, 위협 증대될 시 '추가적 조치' 검토 합의(5.14) /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 저자세 방미외교 비판하며 광주 5·18 묘역 입구 집회...검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으름장(5.18)

3. 누가 더 위험하지?  
미, 내년 예산에 핵무기 관련 64억달러 배정(5.12) /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국인 거주지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30여명 숨지고 194명 다쳐(5.12~13) / 부시 미 대통령, 테러 배후 추적해 응징할 것이라 밝혀...사우디 당국, 배후로 알카에다 지목(5.13) / 파월 미 국무장관 방문한 러시아 체첸에서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14명 숨지고 수십 명 다쳐(5.14) / 일본 중의원, 전시(유사) 대비법제인 세 개 법안 통과시켜...일 자위대 전쟁 개입 허용(5.15) /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41명 죽고 100여명 다쳐(5.16)

4. 기타  
ILO보고서, 에이즈 보균자·여성·특정 종교인에 대한 직장내 차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혀(5.12) / WHO보고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126만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 중 90% 정도가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밝혀(5.12)

일년 전 어제는 발산역에서 윤재봉(지체장애 1급) 씨가 리프트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날이다. 일년 전의 사고를 세상은 잊어가고 장 씨의 죽음도 잊혀져 가겠지만, 매일 이동에 목숨 걸고 다녀야 하는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박영희님은 장애여성공감 대표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1일(수)

제 23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사회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 발생 시 국가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중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장관에게 긴급조정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고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립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민주노동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군사정권 하에서나 나올 법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은 모든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라면서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을 매우 자의적으로 규정해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 역시 "전시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업무복귀명령권을 정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가 '독립 사업주'라고 말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하

겠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20일 논평을 내고 "취임 이후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남용되어 왔으며 이를 신중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공익사업장도 아닌 화물연대와 같은 사업장 파업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공언해 온 원칙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 손낙구 교육전선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의 교훈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한 정부의 무사안일이 낳은 결과였는데도,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파업중지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배경내)

## "이동권 보장, 서울시 마지막 기회 준다"

###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서울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동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 없다. 다음에는 서울시청 앞의 지하철을 멈추게 할 것이다"

19일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했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농성을 정리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지나해 5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 안전대책 마련과 이동 지원 전담 역무원 배치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전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행 대수와 시간 확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19일 오후부터 20일 오후까지 하루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2면에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애초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네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현재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또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동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인권위·전교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들 중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는 주장을 퍼기도 했다. 19일에는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 인권위 권고 내용과 무관하게 네이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에 적극적인 반면, 인권위는 자신의 권고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미흡한 권한이나 인권위법 제20조 2항에 의거, 자신의 권고를 수용하는 데 미온적인 교육부를 상대로 지금까지도 협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 법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내용을 왜곡하려 했을 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때때 반박 논리를 적극 전개할 필요도 있다. 19일 교육부는 네이스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문이 오류투성이라는 식으로 공개적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사실 인권위가 권고 이후 후속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위가 최초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울산구치소 구

승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 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의문사위가 고발한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하자,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인권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결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전면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도 인권위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법무부의 전면 이행 불가 통보를 외부에 공표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는 인권위법 제50조에 규정된 처리결과 공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대해 검열인을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가 권고 이후의 후속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법적 권한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정책권고는 명확한 자신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막상 자신의 권고를 실효성있게 만드는 후속대응은 인권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히 네이스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인권위의 후속대응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범용)

(☞1면에서 계속) 별관 장애인복지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동권연대는 "서울시가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오

는 24일(토)까지 공식문서로 답변하기로 했다"며 이봉화 서울시 복지여성국장과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24시간 동안의 농성을 정리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 발산역 사고 이후 장애인들이 단식도 하고 점거도 하면서 정말 술하게 싸웠는데, 서울시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배제'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왜 자꾸 과거의 일을 문제삼느냐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년째 나 몰라라"

이동권연대는 또 아직도 서울시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을 질타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전자는 노동자 신분이라 '봉사자' 신분이라는 것. 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중증장애인을 이동시키려다 허리뼈를 다친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전자 신동권(56)씨의 경우 산업재해 처리조차 되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는 병원비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봉사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애인도 봉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동권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동정과 시혜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해왔던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권연대는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울시 책임자와의 정책 간담회도 제안해 놓고 있다. 이동권연대가 '지하철 철로 점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2일(목)  
제 23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지난 18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연좌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의 연좌시위로 인해 5·18 묘역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후문을 이용하면서 20분 가량 기념행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경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한총련의 시위를 표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난동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활동가는 "네이스와 관련해선 '전교조가 정부를 굴복시키려는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한총련의 시위를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 등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단지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9일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발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엄중 대처할 불법적인 사안인 아닌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인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 탄압의 빌미를 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역시 20일 논평에서 "학생들의 주장뿐 아니라 시위의 방식 역시 '난동'으로 묘사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스스로 '난동자'로 규정하여 통상적인 법 적용 이상의 초강경 대응을 밝힌 것은 일부의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중연대,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250여개 단체에서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총련 검거 방침은 참여정부의 양심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며 "더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21일 광주지법(판사 서정암)은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난동' 규정에 손쉬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법적 처벌을 들이밀었던 경찰의 행보가 일단 주춤하게 됐다.

한총련 사법 처리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대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는 21일 "한총련의 시위 중에 우발적인 요인이 컸던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입건은 하되 불구속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처토록 하겠다는 입장 (☞2면에 계속)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인별 말"

최근 NEIS 시행과 관련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상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는 "야후 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인터넷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를, 행자부에는 정통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요청 거절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주민등록정보는 인구동태 파악 등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정부기관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정보공유에 대한 어떤 절차적 통제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

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가기관이나 민간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이나 UN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 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 '목적명확화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장여경 씨는 "정부는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 시 명확한 목적을 밝혀 국민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혜영)

(31면에서 계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처리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한총련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근예)

##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23일 저녁 6시 알하는 사람들의 특밴드 '햇빛세상'의 공연과 함께 인권영화제 개막식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 길잡이를 맡은 이들은 이주노동자 활동가인 꼬빌 씨와 전북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인 김영옥 씨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끝나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꼬빌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외치며 '노동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꼬빌 씨 역시 추방과 감금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을 선도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영화제 기간 중 25일은 인권영화제에서 정한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 아트큐브에서는 미국에 정착한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드라마 <도시>와 런던에 정착하기 시작한 정치·경제적 난민들에 대한 리포트 <방이 없어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과정을 담은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련된 작품을 집중 상영한다. 특히 멀리 스 위스에서 인권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방이 없어요>의 감독 마리 장 우렉 씨와의 대화도 이 날 있을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 20분부터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특별행사도 진행된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공모를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네 편의 단편영화 <움니버스-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상영되며, 제작에 참여했던 감독들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24일 아트큐브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진행될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는 인권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과 '극복해야 할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화제 관계자뿐 아니라 출품 감독, 관객이 패널로 참석해 이야기를 풀어갈 이 시간은 그간 인권영화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3일(금)  
제 23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또한 지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입까지 서슴없이 틀어막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위와 같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게재된 현수막을 불법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

고자 하는 것은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면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나무랐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회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비난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바라보며 법을 비난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나철성 대외협력부장도 "근래 사법부가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보수적인 판결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계속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주심을 맡은 박재윤 대법관은 2000년 임용 당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임용 이후에도 보수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01년 1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족쇄 유지' 판결, 올 1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판결, 지난해 2월과 올 2월 '조폐공사 파업과 한양공영노조 파업과 관련,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배경내)

### 클릭! 인권정보자료

####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 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담긴 고민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59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상황 결의 관련
  - EU가 제출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 31
  - 결의안 31의 투표에 앞선 북한대표의 발언문
  - 주요 일간지·주간지 관련 기사모음
- ▶ 유엔 북한인권 결의를 둘러싼 인권사회단체들의 입장
  -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좋은 벗들
  - <성명>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 ▶ 북한인권을 보는 다양한 입장
  -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이성훈) / 북한인권, 기아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우선(정목식) / 북한인권 논의의 함정/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김근식) /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박순성)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유수) [최은아]

7회 인권영화제 오늘 개막!!! ● 개막식 : 6시 서울아트시네마



7회 인권영화제 상영 일정		
날짜	서울아트시네마	아트큐브
23(금)	12:00 ♣여기가 끝이다(15) ♣점목의 외침(15) 14:00 ★얼어붙은 땅(63) 16:00 ★도시(88) 18:00 개막식 20:00 개막작 - 선택(103)	12:00 ☆아프간 대학살(60) ♣마이 테러리스트(58) 14:30 ☆파워 앤 테러(74) 16:00 ♣동행(32) ♣우리들만의 이야기(60)
24(토)	12:00 ♣바그다드를 잊어라(110) 14:00 ♣피노체트 재판(109) 16:00 ♣거북이 시스터즈(45) ♣버스를 타자(58) 18:00 ♣단스, 그로즈니 단스(76) 19:30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78) ★국경을 노래하다(43)	12:00 ☆웨더 언더그라운드(92) 14:00 ♣나미비아의 영혼(73) 16:00 ♣선택(103) 18:00 이야기 마당 -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 20:00 ♣20년 후에(120)
25(일)	12:00 ☆내 딸 없이(90) 14:00 ♣보는 것이 믿는 것(52) ♣노동운동가, 그를 살해한 이유(53) 16:00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79) 18:00 ♣김종태의 꿈(59) 19:30 ☆아프간 대학살(60) ♣마이 테러리스트(58)	12:00 ★모험(97) 14:00 ★방이 없어요(63) ★국경을 노래하다(43) 16:20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 행사 (사전 제작지원 작품 상영) 19:00 ★도시(88)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78)
26(월)	12:00 ★나미비아의 영혼(73) 14:00 ☆웨더 언더그라운드(92) 16:00 ♣20년 후에(120) 18:10 ☆파워 앤 테러(74) 19:30 ♣필승 Ver1.0. 주봉희(58) ♣그들만의 월드컵 Ver2.0(54)	12:00 ♣거북이 시스터즈(45) ♣버스를 타자(58) 14:30 ♣김종태의 꿈(59) 16:00 ♣피노체트 아이들(83) 18:00 ☆감춰진 전쟁(63) 19:30 ♣피노체트 재판(109)
27(화)	12:00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79) 14:00 ★방이 없어요(63) 16:00 ♣동행(32) ♣우리들만의 이야기(60) 18:00 ♣경계도시(79) 20:00 ♣나와 부영이(60) ♣점목의 외침(15)	12:00 ♣필승 Ver1.0 주봉희(58) 14:00 ♣여기가 끝이다(15) ♣그들만의 월드컵 Ver2.0(54) 16:00 ♣보는 것이 믿는 것(52) 18:00 ♣노동운동가, 그를 살해한 이유(53) 19:30 ♣단스, 그로즈니 단스(76)
28(수)	12:00 ★얼어붙은 땅(63) 14:00 ★모험(97) 16:00 ♣피노체트 아이들(83) 19:00 폐막식 폐막작 상영 :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사전 제작지원 작품 함께 상영)	12:00 ♣나와 부영이(60) 14:00 ☆내 딸 없이(90) 16:00 ♣바그다드를 잊어라(110)
<개막식> 5.23(금) 저녁 6:00/ 서울아트시네마 <폐막식> 5.28(수) 저녁 7:00/ 서울아트시네마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행사> 5.25(일) 오후 4:20/ 아트큐브 <이야기마당 ·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 5.24(토) 오후 6:00/ 아트큐브		
★ 이주노동자의 인권 ☆ 미국의 전쟁범죄 ( ) 상영시간 ♣ 일반상영작 ♣ 한국영화 * 감독과의 대화 "모든 작품은 무료로 상영됩니다."		

###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 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론되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는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주최로 정부규탄집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NEIS)와 관련해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바로 앞서 민주노동당이 국가위기관리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은 굴욕적 외교에 대한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3개월만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게 될 줄 몰랐다"고 개탄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굴욕적인 외교를 비판하는 한총련과 노동사회단체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화풀이식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거센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날 대통령의 독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업무복귀 명령권' 신설 방안 백지화 △ 5·18시위 관련 한총련 지도부 사법처리 방침 철회 △네이스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 등을 요구했다. (고근에)

<성명>

##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2. 우리는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부가 쏟아내는 일련의 발언 및 조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권위에 의존하는 정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표방했던 이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난동'이라거나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한총련이 폭력적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껏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울가미에 가둬 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개인 정보 항목의 삭제를 시정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교육부였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사실 교육부가 들어야 할 비난이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갖고 있는 인권적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상황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편에 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분명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 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문을 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 5월 18일 시위와 관련한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파업권을 침해하는 '업무복귀 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요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거두라.

2003년 5월 22일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23일 저녁 6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00여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활동가, 영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7회 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쉼터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씨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총 33편의 국내외 상영작 소개,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멀리 스위스에서 찾아온 <방이 없어요>의 감독 마리 장 우렉 씨의 축하,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 <햇빛세상>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올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영화제는 25일을 특별히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정해 멕시코 경제자유특구의 문제점을 파헤친 <국경을 노래하다>와 뉴욕 남미 이주자들의 꿈과 좌절을 다룬 극영화 <도시> 등 이주노동자 관련 영화 7편을 집중 상영한다. 또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아트큐브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나누고 연대의 촛불을 밝히는 특별행사가 마련된다.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정아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동 사회를 맡은 쉼터 씨도 개막식에 앞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쉼터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

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포로살해 문제를 추적한 <아프간 대학살> 등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국내 작품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월드컵 ▲탈북 이주민 ▲성매매 피해어

성 ▲여성 비정규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룬 총 1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 가운데 어떤 작품이 ‘올해의 인권영화’의 영광을 안을지는 28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영화제 전 기간동안 아트큐브 로비에서는 ‘박기범과 함께 하는 이라크통신’ 어린이들이 ‘반전·평화’를 주제로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개막작 <선택>, 관객들 “울고 웃었다”  
오늘 관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작품은 단연 개막작으로 선정된 흥기선 감독의 <선택>이었다. (2면에 계속)

###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예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는 26일 시도 교육감회의를 거쳐 보건 영역만 제외한 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에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인권을 무시하는 네이스를 강행하라고 교육부를 부추기고,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작금의 형국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거듭 밝히거나 네이스는 학사행정 이전에 ‘인권의 문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될 네이스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현행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추긴 네이스의 강행이 교육부에 의해 공식 선언되는 오는 26일을 주목한다. 그 날 드디어 우리나라는 네이스 구축을 통한 전 국가적 정보감시체제를 향해 달음질처 갈 것이고, 정부에 의한 대규모 마녀사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명목상의 인권 허술도 모두 벗어버리고, 결국 인권의 침해자로서의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온몸을 던져 정부의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네이스의 시행을 통해 구축될 정보감시체제는 엄청난 인권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네이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데 있다”면서 네이스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과 교육부에 즉각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긴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낮 12시 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과 김진균·진영종·정대화 교수, 김석연 민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와 네이스 문제를 교단 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네이스 문제는 전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했다”며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 담장 안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간부들을 지지 방문했다. (배경내)

###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와 김천형무소 유족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 150여 명의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6월 임시국회 내 통합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영선 강화 유족회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50년 전 국가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이, 농부들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하고 공비로 몰아세웠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식사도 거른 채 새벽길을 달려왔다는 신용달(73) 씨도 “어릴 때 부모님 다 잃고 50여 년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왔다”며,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고, 한 맺힌 삶이었기 때문에 통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이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살이 있는 지 50여 년이나 흘러 그 유족들은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도 “이 땅 한 군데라도 학살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전쟁전후 백만여 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진작 진상규명 되었더라면, 23년 전 광주에서의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학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이창수 상환실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법안을 이제 깨울 때”라며, “지난 5월 6일 법무부장관이 학살 관련 자료를 적법 범위 안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방부·행자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환실장은 “우리에게 6월 이후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투쟁대회를 마친 각 지역별 유족회 대표단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실을 방문해 6월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허혜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3에 한해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네이스 체제로 운영하되, 고2 이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네이스 이전 체제(CS와 SA 체제)로 시행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 법률·정보 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올해 말까지 네이스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고3 학생들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겨진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집적된 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시를 이유로 현 고3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보건영역 등 대학입시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이관된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네이스에서 완전히 폐기될지도 불투명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 내용은 네이스의 '잠정 중단'을 밝힌 것으로 이후 전면

2003년 5월 27일(화)

제 23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재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새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돼 네이스 강행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던 현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교육부 발표 직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혜영)

##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피감호자 500여명이 일제히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래, 26일 오후 1시 참가자가 600여명으로 불어나 전체 700여명 피감호자 중 대다수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자비로 구입한 사식물까지 밖으로 내어놓은 채 물만 마시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송을 방문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감덕진 활동가는 "다음달 가출소가 예정된 분들도 가출소 취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단식에 참여할 만큼 피감호자들의 의지가 매우 결연하다"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단식농성이 가출소 확대나 처우개선이 아니라 사회보호법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또 "지난해 11월 단식농성을 전개했을 때도 법무부 교정국장 등이 구두로 개

선을 약속했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무부에 대한 피감호자들의 불신이 대단하다"면서 "법무부가 구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요구"라고 전했다.

이달 2일 청송에서 출소한 김원호 씨도 26일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다. 김 씨는 "사회보호법이라는 부당한 법에 의해 억울하게 '형기'를 살고 감옥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으며 5년간이나 갇혀 지냈다"며 "피감호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인 김씨는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푸는 날까지 지지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2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회견을 갖고,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히고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배경내)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①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외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 아마 대법원은 당연히 그러한 현수막은 게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 존재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다. 판결문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표현의 자유임을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판결문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 판결은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헌법의 상위법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표현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판부는 또한 판시이유 중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극단적으로 신성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할 수조차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상위법인 헌법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비난하지 못할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판결은 대법원이 구시대적 냉전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국민의 70%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가 너무나 답답하다.

(이창호님은 경시대 법학교수입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1. '네이스' 공룡 넘어지다

정부, 당정협의 갖고 '네이스 일단 시행 뒤, 새 위원회 구성해 일부 항목 삭제여부 검토'키로(5.19) /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보건영역만 제외하고 네이스 강행 결정...인권·교육단체들, "교육정보위는 네이스 강행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5.19) / 노 대통령, "전교조가 정부 굴복 요구하는 것은 운당치 못하다"며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 요구(5.20) /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에게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시 주의·경고보다 더 높은 수위로 징계하라고 주문(5.22) / 18개 인권단체, 민변·민교협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 민가협, "5·18 시위를 한총련 탄압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5.19) / 전국민중연대 등 250여개 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5.20) / 강 법무장관,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하고 5·18 시위 고의성 여부와 여론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혀(5.21) / 광주지법, 경찰이 청구한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소명자료 부족하고 체포 요건 안된다"며 기각(5.21) / 경찰, 한총련 수배자 3명 검거하고 구속영장 신청(5.25)

### 3. 이젠 '강제노동 명령권'까지 달라 하네

정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산업 집단행동 사태 발생시 민간인력 징발하거나 업무복귀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5.20) /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 발표...전국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도 청와대 앞 정부 규탄 집회 열어(5.22)

### 4. '인권' 위해 전쟁한다더니...

국제엠네스티, 주요8국(G8)이 97~2001년 세계 무기거래량의 3분의 2 차지하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에 무기 공급해왔다고 밝혀(5.19) / 미 판타모 수용소 출소자, 자백 위해 약물 투여하고 있다고 증언(5.22) / 미, 자위대 이라크 파병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5.24)

### 5. 기타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 발산역 사고 1주기 맞아 서울시 사과와 안전대책 마련 촉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벌여(5.19~20) / 흥국생명노조, 회사 쪽 노조파괴공작 문건 공개하고 사측 노동부에 고발(5.21) /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5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농성 돌입(5.2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8일(수)

제 23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 농성이 5일째를 맞이한 27일,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처우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회견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공동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피감호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이 존치되고 있는 현실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상당수는 생계형 절도범인데, 이들이 통상 5년 이상 감호소에서 갇혀 지내다 작업 상여금으로 받은 몇십 만원을 들고 사회에 복귀하면 도대체 잡자라니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들이 결국 빈곤에 못 이겨 다시 보호감호소로 두 번, 세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 사회보호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청송의 피감호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독일의 보호감호제도 다르다”

공동대위는 현재 법무부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기는

커녕 독일에도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있다면서 오히려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대)는 “법무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확연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는 상습범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행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준용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형법에 의거, 법관의 판단 하에 보호감호를 부과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습성’의 인정 혹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없이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피감호자가 1천6백

여 명에 달하는 데 비해, 독일의 경우 2백50여 명에 불과한 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피감호자의 절반 이상이 성 범죄자이고 40%이상이 살인·강도·방화 등 중범죄자인 데 반해, 우리나라 피감호자의 70% 이상이 단순 절도범인 사실 역시 두 나라의 보호감호제도가 그 취지는 물론 적용 대상도 매우 상이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회보호법, 나치시대 법률과 흡사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활동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현 독일의 ‘보안감호제도’가 아니라 과거 나치 집권 직후인 1933년 11월에 제정된 ‘상습범에 관한 법률’과 매우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의한 감호처분이 위험하고 악독한 중범죄자가 아니라 상습 절도범과 같이 단지 ‘성가신’ 존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69년 독일 형법개혁 때 폐지되는 운명에 처했다”면서 나치시대의 야만적 법률을 모태로 한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유 활동가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보호국장은 청송 제2감호소를 찾아가 피감호자들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근에)

## 인권영화제 폐막식 바로 오늘!

▶ 때 : 5월 28일(수) 오후 7시 ▶ 곳 : 서울아트시네마 (☎ 02-720-9782)

▶ 주요 내용 :

-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와 시상
- <옴니버스-여정> 상영
  - :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다룬 4편의 단편영화 묶음
  - : 주현숙의 ‘이주’/ 김이찬의 ‘동행’/ 문성준의 ‘스탑 크랙다운-단속추방 중단하라’/ 믹스라이스·조 니 아웅(버마 이주노동자)의 ‘돌아가기 전에’
- : 영화 <9·11> 배급 수익금으로 인권영화제가 제작 지원
-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상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말문은 뗐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역 인권단체들과 말문 트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전주, 27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는 인권위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것이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국장도 “위원장님 이번 간담회를 지역단체들에게 인권위를 홍보하는 차원의 행사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

지역 간담회는 대개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가량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장의 인사말과 인권위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설명을 3-40분간 진행한 뒤에는 주로 지역 인권운동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단체들이 질문을 하면 위원장이 나서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이었다.

인권위 국내협력과 차승렬 씨는 “지역에서 요구가 많았고, 기대가 높음을 확인했다. 최근 네이스(NEIS)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위에 대한 좋은 인상과 높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 인권위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인권위의 지역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는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간담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권위와 지역 인권단체간의 말문 트기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는 ‘인권위가 마련한 홍보행사에 가서 밥만 먹고 왔다는 느낌마저 들었다’는 활동가도 있었다.

위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법률가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인권위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것이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국장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지역단체들에게 인권위를 홍보하는 차원의 행사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

“지역현안 다룰 때 지역단체 배제말라”

사전에 단체들과 공동으로 질의 내용을 뽑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심히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형 집행위원장은 “인권위가 지역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들을 것을 전제로 간담회에 응했다”면서 “인권위가 지역 인권 현안을 다룰 때는 지역 인권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지역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역단체를 배제하게 되

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역단체들을 소외시킨 채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위원장은 대체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승렬 씨는 “지역단체들은 인권교육, 지역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등을 많이 요구했다. 첫 시도여서 어려움이 많았고, 시간도 너무 짧았다.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 인권위에 대한 비판도 겸허하게 들어야겠다는 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간부들의 생각이다”면서 “이제부터는 지역단체 활동가와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실천적인 논의를 해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4개 지역 간담회는 인권위가 지역단체들과의 관계 맺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고, 평가 역시 그리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례적인 자리에서의 짧은 얼굴 보기를 넘어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지역단체들은 바라고 있다. (박래군)

제1회 평화아카데미 강좌

## “전쟁과 평화 - 이라크 전쟁 이후 우리의 평화 만들기”

- ▶ 5/20 미국 패권주의와 평화론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 ▶ 5/27 전쟁과 여성 인권 /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 ▶ 6/3 On War, On Air : 언론이 만든 전쟁 / 최민희(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
- ▶ 6/10 우리사회의 군사주의와 일상의 폭력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 ▶ 6/17 평화를 노래하라-노래속에 담긴 평화이야기 “비틀즈에서 신해철까지” / 하영일 (전주대 국제경영대학원 전임교수)
- ▶ 6/24 건축물을 통해 보는 전쟁의 기억, 그리고 평화 / 정기용 (건축가)
- ▶ 7/1 1주제 : “총을 내려라,” 이라크 현지 실상 / 이라크 반전평화팀 중 1인
- 2주제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 국내외 반전운동 소개 / 이영수 (민주노동당 중구 지구당 부위원장)

△ 때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곳 : 향린교회 1층 향우실  
△ 참가비 : 30,000원 / 개별수강 가능 △ 문의 : 02-3675-5808~10  
△ 주최 :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평화역사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29일(목)

제 23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굳게 닫혀져 있던 에바다 농아원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28일 오후 2시 40분경,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과 김지원 에바다학교 교장, 남구현 이사(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비롯한 민주 이사진 5명 등은 정문을 쾅쾅 휘감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바리케이드를 밀며 에바다의 문을 힘차게 열어제쳤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구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정문 앞에 모인 이사진의 얼굴에는 2001년 8월 민주적 이사회가 구성된 이래 한번도 발조차 들여보지 못한 에바다 안으로 오늘날은 기쁘고 들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있었다. 지역 노동자들과 학생 1백여 명도 이들 이사진의 뒤를 따랐다.

남구현 이사는 "우리는 에바다 이사가 되고 여기 교장 선생님까지 계신데, 에바다의 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굳게 닫혀있었다면서 "우리는 빨리 업무를 개시해 에바다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 측이 이사진만 들어갈 것을 종용하자, 남 이사는 "이미 이사들만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그때마다 똥물 뒤집어쓰고 부상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폭력을 방관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었다.

최낙성 이사(전교조 경기지부)도 "우리 이사들이나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방문자들은 시설에 들어갈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예전처럼 경찰이 폭력사태를 방지하거나 이사진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2시 40분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정문을 열고 마침내 에바다 시설 안으로 들어섰다. 지난달 해아래집 학생 여러 명을 불러내 폭행했던 졸업생 최모 군을 비롯한 일부 농아원생이 진입을 가로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원생들과 박미영 등 구 재단측 직원을 그대로 방치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농아원에 남아있는 15명 정도의 원생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사진들은 법인 사무실과 학교건물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이사진의 진입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시설 곳곳의 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었고, 구 재단측 비리 관련 자료들도 말끔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학교건물을 둘러본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교실은 난

장관이 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까지 새고 있다"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4시경 시설을 점검하는 도중 본관에서 최성창 씨(전 이사장)와 그의 부인이 숨어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들은 그 동안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사주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이사진들이 시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면서 거절했다. 이사진들이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며 몰아내려 하자, 경찰은 오히려 최 씨를 '보호'하면서 지금까지도 시설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밤 11시 현재, 경찰들이 시설 주변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문 앞에는 최 씨 일가와 이들이 동원한 졸업생들이 물려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바다 안에는 김철준 이사(변호사)를 비롯한 이사들과 학생, 노동자 50여명이 침탈에 대비하고 있다. 에바다의 문은 열렸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입맛취 깨워라~!!

##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중증장애인 한 명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를 점거했다.

28일 낮 12시 20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이광섭 씨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철로를 기습 점거, 쇠사슬로 철로에 몸을 묶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해 발산역과 이달 송내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2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들러 나와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1급 지적장애인이인 이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철로에 내려섰다"며 점거 이유를 밝히고 "모두들 리프트를 한 번 타 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1~2분내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리프트를 이용하면 계단을 오르는 데 20분, 내려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며, 장애인 이동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더욱이 리프트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해 "장애인의 이동은 곧 죽음과 사고의 위협"이라는 것이 이씨의 지적이다.

이 씨가 연행되자 이날 오후 2시 서울 해화동 모터리에서 '23차 장애인 버스타기' 시위를 벌였던 이동권연대 회원들은 종로경찰서까지 버스로 이동, 이 씨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의해 2시간 동안 맞은편 길에 격리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사고의 책임 인정과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안을 서울시 제 시하고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본지 5월 21일자 참고> 그러나 서울시는 24일 보내 온 공문에서 "발산역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안전대책 역시 마련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노를 샀다.

버스타기 시위에 참석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상갓집에 가서는 누구나 죽음에

유감을 나타내는 법"이라며 "서울시의 유감표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1호선 전철 세류역에서 70대 노인이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박 공동대표는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을 좁히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공동대표는 "현재 사고책임은 전동차 운전자에게 몰아가고,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은 안전대책 마련은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계속되는 사고에도 책임지는 곳 하나 없는 현실에 분개하며 "교통약자들이 죽음으로 내 몰리는 야만의 시대"라며 개탄했다. (고근예)

##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리 올해의 인권영화상,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

28일 7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2백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폐막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제를 만들어 온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가운데 9명이 무대로 직접 나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작품 섭외에서 번역·자막 작업, 부대행사 기획까지 영화제 준비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물도 함께 상영됐다.

무엇보다 폐막식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올해 인권영화상'. 12편의 한국영화 후보작 중 인권영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은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이었다. 이 작품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한 김종태 씨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으로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씨네21의 안정숙 기자, 이승훈 EBS 교육방송 프로듀서, 그리고 조종국 조우필을 대표 등의 영화제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수상작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른 안정숙 기사는 "12편의 후보작 중 <거북이 시스템>, <경계도시>, <버스를 타자>, <그들만의 월드컵>,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김종태의 꿈> 등 총 6편이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였다"며 "그중 <김종태의 꿈>은 김종태의 사상과 사명감, 답답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 인간이 어떻게 분신자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설득력있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안 자문위원은 또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김종태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 민중의 고난 그 자체에 생생하게 접하게 되며 우리의 '살아남음'의 의미에 대해 가슴 아픈 성찰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영화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노동자이자 야학교사의 죽음을 발굴해냈다는 점을 높이 치하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김성환 감독은 "김종태 씨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상인데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다"면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폐막식에 이어서는 인권영화제가 지원한 4편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편영화들 모은 <옵니버스-여정>이 상영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6일간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연인원 5천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4일 아트큐브에서는 출품 감독과 관객, 인권운동가가 패널로 참석해 인권영화제의 대중성, 선정기준, 무료상영 원칙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열린 토론을 벌여 지난 8년의 영화제를 되돌아봤다. 특히, 이번 영화제 기간동안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정된 25일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관객이 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기도 했다. (허혜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30일(금)

제 23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인권침해 '달' 하겠다?

###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의 단식농성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방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개선하는데 그쳐,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보호감호 혁신방안'이라는 이른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보호감호 업무를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전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시스템 강화 △가출소 기회 대폭 확대 △귀류 및 사회견학 확대, 근로보상금 인상 △감호 집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시설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각종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내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이 전혀 '획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호소측을 통해 법무부 발표안을 전해 들었다는 피감호자 조모 씨는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아래 공대위)측에 전화연락을 취해 "법무부 안은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며, "보호감호 폐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가출소한 김모 씨도 "지난해 단식투쟁 당시 감호소장이 약속한 내용을 보호국 차원에서 발표했다는 것 이외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안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찬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도시 인근지역에 보호감호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는 보호감호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보호감호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보호감호의 전면 폐지 외엔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제출된 개선안의 실효성 여부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활동가는 "외견상으로 가출

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출소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사회보호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귀류 및 사회 견학 확대 등의 처우 개선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29일 긴급회의를 가진 공대위는 오늘 법무부 방안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다음주 초 청송감호소 출소자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출소자들의 사례발표와 피감호자들의 현지 발언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쪽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03년 중점과제로 사회보호법을 선정한 국가인권위는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지은이: 커스틴 샬라스 / 옮긴이: 오승훈 / 펴낸이: 은행나무 / 2003년 5월 / 457쪽

'인권'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게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킨 '침략의 언어'이기도 하다. 침략의 언어로서 인권은 20세기 어떤 얼굴로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는지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마치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같다. 보편의 허울 속에 숨어 있는 인권이 실제로 강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도록 위엄있어야 할 국제인권문서들이 왜 아름다운 말 잔치로만 끝나는지 그 이유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는 1940년대 중반 루즈벨트 집권 이후,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확대시키고자 국제주의를 대중화시키는 방편으로 인권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강자의 윤리로 수단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성안과정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드라마이고, 전법재판은 인권 심자군이라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해야할 목적이지만 그 이면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인권이 갖는 이러한 속성은 인권운동가를 당혹스럽게 한다. 우리의 인권운동이 그 한계를 넘고 일어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최은아)

##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29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망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 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어 "자본 특구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신대 국제학부 송주명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내기업들이 이 법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종래의 고용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희수 대외협력실장은 "피추기를 낚벌 해온 지난 5년 동안의 외자유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국부를 낚는 황금거위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노진귀

정책본부장도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지속하는 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운동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중 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언론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하혜영)

(이면에서 계속) 29일까지 단 한 사람의 관계자도 청송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정치일정을 핑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를 항의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단식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29일, 감호소측은 "지난 28일부터 매일 3~4명의 단식농성자들이 의무실에서 링거주사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정)

##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한국대학생총연합회(아래 한총련)의 '한국 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29일 오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의 합법화와 '한국 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한총련을 대중조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 보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마땅히 이번 한총련 5월 축전을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도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비판하며 벌인 5.18 시위를 빌미로 한총련의 합법화와 사회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한총련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시작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한총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경찰의 과잉 대응이나 언론의 왜곡 보도 등을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오늘 오후 1시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이어 한총련도 이날 낮 1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대학생 5월 축전 준비 현황 및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총련은 "5·18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이를 빌미로 한 11기 한총련 탄압과 이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한총련에 대한 검·경찰의 탄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은 "새 시대 한총련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온 국민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한국 대학생 5월 축전'을 준비했다"며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 이제는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근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5월 31일(토)

제 23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 재단측 직원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제 1년 6개월 동안이나 굳게 닫혀져 있던 에바다농아원의 정문이 열린 지 3일째 되는 30일,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 이사회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하나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다.

에바다 이사회는 지금까지도 이사회를 자기 중심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최 전 이사장을 에바다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이사들과 노동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최성창 전 이사장을 퇴거시킬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9일 에바다 이사회는 최 씨를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한때 경찰은 기숙사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최 씨를 전격 퇴거시킬 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소방차와 119구급차를 동원하고, 창문 밑에는 매트리스를 깔아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다. 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최 씨는 스스로 시설 밖으로 나가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상에 응했으나, 밤 10시경 다시 마음을 바꿔 퇴거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앞서 에바다 이사회 측은 오전 10시 30분경 법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이면서 그간 폭력을 사주해 온 최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을 퇴거시킬 것 △경찰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

장할 것 △평택시청 등 관련 기관들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협조를 다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또 농아원 재정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미 해임된 양봉애 씨가 버젓이 농아원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했으며, 농아원장이 공식

중인 시기에 불법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시청에 재정 지원까지 했다는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에바다 평택 공대위와 지역 주민 250여명은 오후 7시경부터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최 씨를 즉각 퇴거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에바다공대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문 앞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 씨의 강제 퇴거를 경찰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어서 에바다 정상화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배경내)

###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다. 청송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벌써 일주일째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의 약탈함을 바깥 세상에 고발하고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는 피감호자들이 택해야 했던 길이 바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을 게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국회도 아닌 일종의 '쿠데타 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그간 이중처벌 등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이른바 '상습범'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러기에 그간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공룡은 거친 숨을 내뿜고 있다.

이번 집단단식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감호시설을 신설한다는 법무부의 '획기적'인 <보호감호 혁신방안>이 이들의 단식을 멈출 수 있으리란 건 순진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형태야 어떻든 보호감호제도가 존속하는 가운데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감호자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 분노케 만드는 것은 법무부가 아니다. 보호감호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청송으로 달려가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들어보기는커녕 지금까지 뒷짐만 쥐고 있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올해의 주요 인권과제로서 '사회보호법'을 선정하지 않았던가?

국회도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곡기를 끊은 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피감호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발의는 차치하더라도,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일은 가능할 텐데, '표'가 되지 않으니 움직일 생각조차 않고 있다.

지금 청송의 피감호자들은 몸뚱아리 하나로 사회보호법의 아만을 고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국회는 정녕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자 하는가?

##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 흐름과 쟁점

#### 1. 학생정보, 학교담당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보진/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13).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 강행을 위한 교육부의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5/14~19), 전교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연가집회를 결정했다(5/19). 다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네이스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맞섰다(5/23). 결국 교육부는 전교조와 협상 끝에, 고2 이하에 대해서는 네이스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고3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5/26). 그러나 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반발해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복귀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반면 1천89개 사회단체들은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5/30).

#### 2. 한총련 합법화, 갈 길 멀다

수배자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5/18).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난, 이 사건을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5/19~20). 그러나 끝내 광주법원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5/30).

#### 3.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을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고(5/10), 이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송내역에서 추락 사하자(5/14),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5/15). 발신역 장애인 추락사고 1주기를 맞은 19일에는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했다(5/19). 이들은 공식 답변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으나(5/20), 서울시는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더 이상 책임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5/24). 이에 항의해 1급 지체장애인 한 명이 광화문역 철로를 점거했으나 20여분만에 경찰에 연행됐다(5/28).

#### 4. 잠든 학살규명 특별법, 흔들어 깨우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64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100만 피학살 원혼 해원곳이 열렸다(5/2). 이어 한국전쟁 당시 김천형무소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시신 매장에 강제 동원됐던 주민 2명의 증언과 매장지로 추정되는 5곳에서의 탄피와 유골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5/8). 이어 전국 150여명의 유족들은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3년째 잠자고 있는 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5/23).

### 논평

-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5.3)
-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려는 것인가 (5.10)
-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5.17)
-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5.24)
-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5.31)
-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5.23)

### 인권이야기

- 김철준 - 인권의 감수성 (5.13)
- 박영희 -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5.20)
- 이창호 -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5.27)

### 인권정보자료

-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 장애인』 (5.16)
-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 자료묶음 (5.23)
- 『인권, 그 위선의 역사』 (5.30)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네이스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인권위 말실언, 관행으로 굳어지나 (5.7)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5.21)
- '말문은 뚫었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5.28)

### 기고 -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 〈상〉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5.7)
- 〈하〉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5.13)

###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5.2) 〈끝〉

### 7회 인권영화제 소식

-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 (5.3)
-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세 편의 영화 (5.8)
-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않는 전쟁', 〈선택〉 (5.30)
-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5.22)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3일(화)

제 23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반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입력항목 중 일부를 삭제한 후 운영한다는 세부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총 358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여부, 부모사망, 종교, 징계내용, 부적응자 관리 등 236개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규정, 전면 삭제를 권고했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6월중 구성돼 네이스 시행을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가 또다시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정보 삭제수준이 이번 시행지침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더욱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초 네이스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가 전교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의 개혁 의지도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부

의 인권보호 의지에 강한 불신을 표하며 반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새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미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반인권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개혁정부인

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교조도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합원 연가집회를 비롯한 네이스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와 서법석 교육부 차관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허혜영]

##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식하고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인권운동사랑

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을 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91년 수많은 노제 행렬 중 유독 서준식 씨만을 표적 삼아 집시법을 적용한 것이나 애초 외압으로 영화제를 불허했던 홍익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어코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 역시 '처벌을 위해 짜맞춰진 범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내)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① 에바다의 속제

지난해 1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비리재단 쪽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강 건너 불 보듯 났집 지고 서 있는가 하면, 되레 합법적인 이사진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나 역시 뼈곡이 기록한 기사수첩을 옛 재단 쪽 사람들에게 순간 강 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에바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평택 경찰, 교육청, 시청 등과 구 비리재단의 유착의 뿌리는 깊고도 깊어, 구 비리재단의 농아원 불법 점거 상태는 끝날 줄을 몰랐다. 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이자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농아원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무언가인 모양이었다.

그러던 지난 5월 28일, 에바다 농아원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7년간의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에바다 농아원의 잠긴 문을 열어제친 것은 지역의 노동자, 학생들과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적인 이사진들이었다. 이제서야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뎌 아니다. 최성창 전 비리재단의 이사장이 평택 경찰의 비호 속에 농아원 내 기숙사에 거거하며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어린 농아원생들을 기숙사에서 '불모'처럼 잡고 있던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비리재단 쪽은 번번이 농아원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다. 이리하여, 이 아이들은 함께 공부했던 헤아래집의 친구들을, 선생님을, 새로운 이사진들을 불신하고 때론 폭력까지 휘두를 것을 강요당했다. 최근에는 두 달 간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 해, 교육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이들 청각장애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내몰며 아이로서 밝게 자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현재 구 비리재단이 벌이는 인권침해의 정점을 이룬다.

구 비리재단의 수명은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다. 최성창 전 이사장이 불법 점거 상태를 끝내고 에바다에서 나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에바다 복지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폭력에 길들여진 일부 청각장애 아이들 마음에 가로 새겨진 상처와 어두움을 치유하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 장애 아동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자 교육시설로 새로이 거듭나야 함은 물론이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앞으로의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적 운영이, 비리와 인권유린의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 시설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주는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총 점검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모두,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은 벌써부터 꿈꾸어 온 것들일 테다.

(이주영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1. '네이스' 공룡, 다시 일어서다  
전교조-교육부, 고3 제외하고 고2 이하에 대해 네이스 3개영역 한시 중단기로 합의...시·도교육감협의회, '네이스 강행' 밝혀(5.26)/ 교총,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윤 부총리 퇴진 요구서 전달하고 연가투쟁 계획 밝혀(5.27)/ 교총, 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업무 거부 서명용지 배포(5.28)/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네이스 중단하라'는 그동안의 소신 버리고 네이스 시행 촉구...초·중·고교 교총협의회도 부총리 사퇴 요구하고 CS 관련 교육부 공문 접수 거부키로(5.29)/ 총리실에서 학교 실정 따라 네이스 운영 허용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5.30)/ 1089개 사회단체, 교육부에 전교조와의 합의 성실 이행 촉구(5.31)/ 교육부,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 닦아내기로 뒤집고 네이스 3개 영역 시행 중단 기간 중 학교 상황 따라 네이스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혀...전교조, 연가투쟁은 물론 대대적 네이스 불복종운동 벌이기로(6.1)

2. 사회보호법의 야만, 두고 볼 건가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단식농성 참가자 600여명으로 불어나(5.26)/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법 폐지 촉구하고 피감호자 600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5.27)/ 법무부, 개방형 보호감호시설 신설과 처우개선 등 개선안 발표...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연립회의, 피감호자 집단 단식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비판 성명 발표(5.31)/ 대한변협, 성명 내고 "보호감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인권적 제도"라며 즉각 폐지 촉구(5.3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최성창 전 이사장, 농아원내 계속 머물러(5.28)/ 에바다 이사회,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최성창 씨 고소(5.29)/ 에바다 평택 공대위와 지역 주민 250여명, 최성창 씨 즉각 퇴거와 에바다 정상화 촉구 집회 열어(5.30)

4. 기타  
중증장애인 이광석 씨, 광화문역 선로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좌와 지하철역 장애인 추락사 책임 인정 촉구하며 시위 벌이다 연행(5.28)/ 국제엠네스티 연례 보고서, 미국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 탄압하고 국제법 기초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5.28)/ 대우자동차판매(주) 노조, 회사의 노조과파 공작 문건 대거 추가 공개(5.29)/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순례단, 65일간 대장정 마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7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중단 촉구 시민대회 열어(5.3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4일(수)

제 23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일주일째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이 경찰서로 전격 연행됨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입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농아원생들이 돌이나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저항할 수 있다는 우려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으나,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정문과 후문을 깨며 기숙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우선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가구들과 벽돌 100여 점 등 위험한 물건들을 끄집어냈다. 현 에바다복지회 이사진의 협조 아래 압수수색이 이뤄진 본관 지하실에서는 식칼 30여 점과 쇠파이프, 각목, 대형 가스통 등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식칼과 쇠파이프에는 청대이프가 감겨져 있어 이사회는 과거 폭력행사 과정에 사용되던 물건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1시간쯤 지나자, 최 전 이사장과 직원들, 농아원생 등 20여 명이 기숙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수색에 협조해 달라며 버티고 있던 최 전 이사장 등을 설득, 이들을 모두 경찰 버스에 태웠다. 그러나 잠시 후 그동안 구 재단측과의 유착 의혹을 받아왔던 평택 경찰의 개입으로 폭력에 앞장서 왔던 졸업생과 농아원생 10여명은 기숙사에 그대로 남겨졌고, 최 전 이사장과 직원

박미영 씨 등 9명만 평택경찰서로 연행됐다. 반면, 현 이사회에 요청으로 본관에 머물고 있던 노동자, 학생 15명과 에바다학교의 권오일 교사는 전원 경찰서로 이송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이사장과 박미영 씨 등은 업무 방해와 주거침입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저항한 것이 문제가 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이

절도금액 총 20여 만원, 5년 6개월의 본 형기 외에 보호감호소 구금 기간만 12년 6개월. 지난 20년 간 되풀이된 단순 절도로 감호소 생활만 12년 넘게 한 장모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증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섰다.

3일 오전 11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에 의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가출소환 6명의 출소자들은 이번 청송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언에 나선 장씨는 "사회보호법이 피감호자들의 사회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건 말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루 1천4백원의 근로보상금으로 감호소에서 5~6년을 살아도 3~4십만원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 측은 최 전 이사장 등이 연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불법적 상황은 해결됐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구 재단측 침탈에 대비해 자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조속한 시설 개·보수를 거쳐 업무를 정상화하고 구 재단측 서류들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해 시설비리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농아원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지부는 특히 "평택경찰은 최성창의 경찰인가"라며 최 전 이사장을 비호하는 평택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배경내)

또 다른 출소자 장모씨도 "사회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사회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중처벌에 불과하다"며, "5~6년씩 가둬두기만 하는 사회보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도 "피감호자들의 단식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체부터 불합리한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 인권적 이중처벌인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대위는 청송 피감호자 6백30여명의 위임을 받아 이달 10일경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해 온 청송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 문제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3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고근예)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난 달 26일 제42차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불가'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3일자 참조>

이는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견제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여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맞선 인권의 나팔수 역할을 기대'하며 인권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인권단체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김창국 위원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옹호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 불공정 불기소처분은 인권침해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동운 인권위원은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만을 각하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제3의 경

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자체가 인권침해 행위임은 명백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9헌마10 결정 등) 따라서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에 의해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 위원들의 주장이었다.

### 법조계, 보수적인 법 해석 내놓아

이러한 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권위가 불공정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42차 전원위원회 안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공정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인권위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조계 단체들은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두 경우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검찰항고 등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권위는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봐서 각하해야 한다고 것이 법조계 단체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은 조금씩 달랐다. 한국헌법학회, 법무법인 삼한 등은 검찰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

다. 법무부는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재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확정의 상태이므로,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일단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인권단체들, 법조계 논리 반박

반면 1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는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가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열린회의는 "이 사안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향후 활동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해 인권위의 자문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열린회의는 의견서에서 "검찰항고 등은 진정인의 항고 등에 의해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라며 "개시되지도 않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의제하여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회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당해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법조계 단체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만약 법조계 단체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헌법소원은 인권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은 1백80일이 경과함으로써 구제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졸속적인 인권위 의결과정

이처럼 불공정 불기소처분의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권위는 가장 적극적인 해석을 받아들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마땅히 택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의결과정을 보면, 인권위는 법조계가 제출한 보수적인 법 해석을 근거로 검찰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몰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공정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이 1년 가까이 신중하게 논의되어 온 것과 비교할 때, 이는 분명 졸속적인 의결과정이었다.

당시 제42차 전원위원회를 방청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전하는 의결과정이다. 먼저 안전실명과 자문의견에 대한 사무처의 발제가 끝나자, 김창국 위원장은 모든 법조계 단체들이 인권위의 자문요청에 대해 각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원위원회에 각하 의견을 주문했다. 이때 신동운 위원이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예로 들며 '각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김 위원장은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신동운, 김오섭, 이흥록 등 3명의 위원만이 불공정불기소처분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법조계 출신인 유현, 조미경, 김덕현 위원은 물론, 운동 경험이 있는 박경서, 류시춘, 정강자 위원도 신 위원들의 문체적 식에 동의하지 않은 셈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인권위가 불공정 불기소처분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정리해야 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조계 단체들 사이에서도 각하의 사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 오영경 씨는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인권위가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스쳐가는 분위기였다"라며, 이번 의결과정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은 불공정불기소처분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이 자의나 독선, 혹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인권침해 혹은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 상태를 지속시키고 침해된 인권의 회복을 가로막는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한 가해경찰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울산구치소 구송우 씨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권위는 가해 교도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가혹행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친다

그렇다면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왜 조사를 포기했을까? 이에 대해 열린회의는 3일 성명에서 "불공정 불기소처분을 인권침해로 체감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인권위가 공감하지 못한 채 "단지 법리적인 해석만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견제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김창국 위원장의 안이한 인식도 한 몫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야 할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도 불만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이 불기소하였으면 그만큼 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이는 인권위원장이 할 이야기인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으로, 어쨌거나 검찰 출신인 김 위원

장의 부족한 인권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인권단체 의견은 푸대접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적 사고만을 강조했을 때 인권단체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번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대해 인권위가 자문을 요청한 8곳은 모두 법조계 단체들이었다. 인권위가 자문을 구하는 곳도 지금까지는 주로 변호사, 법학자, 법조계 단체들로, 이는 인권위가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인권의 언어보다는 법률적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인권단체가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권위로부터 푸대접을 당하기 일쑤다. 이번 불공정 불기소처분이 대표적인 경우로, 김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안건지에 열린회의 의견서가 포함된 사실을 보고 "우리가 (열린회의에 자문을) 요청했나? (요청도 안 했는데) 이걸 왜 여기 넣어?"라며 인권단체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 당시 방청을 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김 위원장이 열린회의의 의견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것 없다는 식으로 전원위원회 분위기를 몰고 갔다고 분명히 전했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보다는 '법률'위원회라고 하는 편이 맞을 듯싶다. "위원장의 사고 안에는 법률단체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험했던 조직 이외의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전혀 유의미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가'라는 이름 값에 부응하는 활동의 연장선일 수는 있지만, 인권 마인드를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인권활동가의 신랄한 비판 앞에서 김창국 위원장과 인권위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5일(목)

제 23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여의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은 호주승계 순위 등 호주 관련 규정과 아내의 남편 본적 강제 입적 규정의 전면삭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성씨를 부모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모 또는 자녀가 필요에 따라 성씨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이날 공동연대는 한나라당을 향해 “호주제 폐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민법 개정안의 찬반여부는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개인이 ‘나’를 중심으로

자신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하나의 호적을 가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만이 남성 가장 중심의 봉건적 종속관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자신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넘어 서는 대안적 신분등록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가족별 호적편제는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현행 호주제의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결혼한 남녀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해놓고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있어 동성애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도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동성애자연합 등 동성애자 단체들도 참가해 “호주제는 남성중심·이성애중심 문화의 바탕”이라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우리 사회는 호주제를 통해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결혼할 권리와 아이를 입양·양육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조차 가족단위로 편성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혜영)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문의: 02-741-5363 (범용)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다.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등 국회의원 42명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종묘 앞 광장에서의 잦은 집회와 시위로 인해 문화적 가치 하락이 우려되며 종묘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 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네 번째 금지장소로 ‘종묘’를 추가함으로써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마스크 등 각종 표현매체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박탈되어 있는 사람들의 언론”이며 “집회 시위 개척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찾는데 자율권을 주는 것이 우리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여론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소수자들의 권리는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법안 통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집시법 제11조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사관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서울 도심의 건물주들은 대사관 입주 경쟁을 벌이면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해 왔다. 국회에 항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대가 의사당 100미터 선을 넘으면 경찰은 이 조항을 탄압의 구실로 이용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적된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집회·시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해온 셈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유지와 상충될 때는 법률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집회와 시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도 안되며, 현행 집시법 11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른 조항들과 함께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강성준)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상>

### 최초 제작지원, 이주노동자 옴니버스 진한 감동

지난 달 28일 막을 내린 제7회 인권영화제에는 약 5천 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지난 해 5천6백 여명이 영화제를 찾았던 데에 비하면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그러나 짧은 홍보 일정과 언론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관객이 유지된 것은 ‘인권영화제를 이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내의 영화 33편이 두 개의 극장에서 65회 상영되었다. 올해 관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작품은 단연 <선택>이다. 영화에 대한 소문도 어느 정도 퍼지는데 개봉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인권영화제에서 앞다투어 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영화가 상영된 지난 23일, 서울아트시네마는 그야말로 발디딜 틈도 없이 빼곡이 찼고, 관객들은 103분 상영 내내 웃고 울기를 반복했다. 관객들은 영화를 함께 관람한 안학섭 씨 등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며 이들이 평생을 걸었던 ‘선택’에 지지와 존경을 보내기도 했다.

<나와 부엉이> <거북이 시스템즈>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등 한국영화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교적 좋은 시간에 상영 스케줄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인권영화제 이전부터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작은 <아프간 대화살> <파워 앤 테러> <도시> <피노체트 재판> 등이 많은 관객을 불러모았다.

무엇보다도 뜻밖의 반향을 일으킨 작품은 인권영화제가 최초로 제작을 지원한 작품, 옴니버스 <여정>이었다. 올해 주제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의 결과물인데 워낙 제작 기간이 짧았던 탓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첫 상영이었던 5월 25일 아트큐브는 너무나 많은 관객들이 몰려 영화제 측은 ‘이주노동자’부터 먼저 입장 시켜야 하는 ‘차별’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영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제작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만큼 상영시간 압박해서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상영시간이 되어서야 상영본이 도착, 테스트도 하지 못한 채 상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감독들조차 전편을 보지 못하고 틀었던 <여정>은 63분 내내 관객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한 성공적인 것이었다.

<여정>은 반복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방글라데시 현지 취재를 통해 담은 ‘이주’와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이었던 아모르 가구의 파업 현장을 가슴 아프게 담아낸 ‘동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투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스탑 크랙 다운’,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만든 ‘돌아가기 전에’ 네 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6일(금)  
제 23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 기독교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이 사회에서는 신앙의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대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이 한 신앙인이기도 했던 그의 생애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한국 교회에 의한 타살입니다.”

5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가 위치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는 동성애자 고 윤현석 씨 추모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아래 한기연)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예배에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동성애자인권연대, 다함께 등의 회원 60여명과 ‘로템나무그늘’의 전우섭 목사, 강남 향린교회 김경호 목사 등이 참석해 지난 4월말 자살한 윤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억압함으로써 윤 씨의 죽음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보수교단, 특히 한기총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터져 나왔다. 이들이 한기총을 규탄하며 그들의 사과를 촉구하게 된 데에는 윤 씨가 한기총의 동성애 관련 성명에 크게 분노했으며, 유서에도 한기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자, 한기총은 4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율황불 심판으로 망하였”으며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나갈 가정의 붕괴뿐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배태하

고 있다”며 권고의 철회를 요구한바 있다. 동성애자를 사회적 악이자 ‘정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7년째 동성애자 교인들과 함께 예배와 상담을 진행해 온 전우섭 목사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교리나 교파에 의해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웃들이 없나 살피려야 할 것”이라며 교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박현정 부의장도 “우리에게는 동성애자들을 옥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사회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때 그들은 차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활동했던 동성애자인권연대의 고승우 사무국장은 울먹이며 “사람을 사랑하라는 교리를 전파하는 기독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율황불의 심판’을 언급했을 때 너무나 분노했다”면서 “한기총의 오만함을 규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며 주최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한기연은 한기총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오는 19일까지 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때 2차행동을 벌일 것을 경고하는 사과촉구문을 한기총에 전달했다. (배경내)

구독료 지로 납부  
1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역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목록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한국 정부 대표단 기초발제문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이 모두 담겨있다.

이 자료집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 내 아동의 인권실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여러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치 유엔 회의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부 보고서의 심사회의 녹취록을 정리해놓고 있어 심사과정의 분위기나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사한 후, 1차 보고서 심사후 채택된 권고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을 책임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치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아동권리 증진의 결실로 맺어질지 혹은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칠지 ‘이행’의 몫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이 자료집은 인권활동가, 아동관련 업무종사자, 연구자 등에게 유용하다. (최은아)

◎ 자료문의 : 김원원 ☎ 02-741-5363

## 확장실도 부역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수, 화장실, 부역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촉진법(아래 주택법)을 입법 예고해 기대를 모은바 있다. 당시 법안에서는 주거면적,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및 환경 등 최저주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는 2001년 법안에서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삭제한 채 국회에서 주택법을 통과시켜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주거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욱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지표는 실제로 침실이 부족하거나 전용 부역, 화장실이 없는 가구(총 330만 가구, 전체 가구의 23.1%)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정책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1백만호씩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여전히 집조차 없는 가구가 존재하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키며 “이는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또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어렵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와 관련해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반대하며 정책적 활용만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홍 책임연구원은 “법제화되지도 않은 최저주거기준이 정책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과거 90년대 초 영구임대주택이나 김영삼 시절에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고,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했던 2001년 이후도 정책적으로 최저주

거기준을 활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은 과거 정부정책이 주거환경과 복지보다는 투기억제와 주택공급에 치중했던 점을 인정하며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되면, 기준에 미달한 주거환경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가 있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히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연·우암동 주거대책위, 부천 오세동 세입자 대책위, 서울 공릉 1단지 주민 등 1백4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고근예)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보다 <하>

### 도전에 직면한 '무료상영' 원칙

올해 인권영화제의 후원회원 가입은 약 1백명 정도에 그쳤다. 3백여 명이 웃돌았던 예년에 비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후원회원 가입을 수 차례 독려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었다. 이는 극장으로 상영장을 옮기고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관객들이 영화제를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제 초기에는 ‘빛을 지며’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1997년 정부의 탄압은 영화제에 재정적인 위기까지 안겨주었다. 이후 <천재전투> 등 상영작을 비디오표 배급하면서 영화제의 살림살이는 주름살을 펴게 됐다. 그래도 후원회비가 여전히 영화제 전체 수입원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이 비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 행사로서 무료로 모든 영화를 상영한다는 원칙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5월 24일 있었던 이야기마당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에서 이미영 감독은 “유료 상영일 때 관객들의 관람 태도가 훨씬 다르다. <먼지 사복을 묻다>를 유료 상영했을 때 관객들이 더 많이 오기도 했다”면서 유료 전환을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관객들이 상영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영화 도중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러한 관람태도는 무료 상영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권의 보편성을 실천하며 상업적, 대중 추수적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지켜왔던 ‘무료상영’ 원칙이 관객들에게 갈수록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마당에 참석했던 한 관객은 “영화제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상영’ 원칙을 홍보해야 한다”며 “관객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주최측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번 영화제는 관객수, 상영작 수준, 인지도 등에서 안정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영화제가 초기부터 지켜가고 있는 원칙을 ‘대중 속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를 강하게 문제제기한 자리이기도 했다. ‘올바른 대중성’이라는 숙제를 등에 업고 7회 인권영화제는 일보 전진한 셈이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의료단체에 덧씌운 '이적' 올가미

###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지법 형사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에서 활동했던 이상기(제주대 의대 교수) 씨와 권정기(전 일산 ㅈ보건소장)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들어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약사 등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95년부터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해 공개적으로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왔으나, 2001년 초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 이적 문건 1300여종을 제작한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상기, 권정기 씨만이 2002년 1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

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반자본 진보노선을 이념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결론지었다.

##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 평택 검·경의 구제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평택경찰이 쇠파이프 들고 에바다 농아원에 난입해 집단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구 제단축에서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아인 등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쇠파이프로 주변 차량과 농아원내 건물 유리창을 파괴한 것은 물론, 난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진들을 도와 농아원을 자체 경비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경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사회측은 당일 폭력 가담자 중 8명이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에바다 농아교회 교인들이었고, 당시

2003년 6월 10일(화)

제 23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이에 대해 이상기 교수는 "진보의련은 의대 선후배 20여명이 만든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 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으며, 법원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대학교 교수 및 보건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행위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박종식)

현장에 최실자 전 농아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번 폭력사태가 구 제단축 사주에 의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폭력 가담자 중 20명은 현장에서 평택 경찰서로 연행됐으나, 당일과 그 이튿날 모두 풀려나 현재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폭력행위를 주도했던 에바다 졸업생 양영수, 주재진 씨는 지난해 2월 남정수 전 복지회 사무국장과 권오일 교사에 대한 집단폭행과 같은 해 3월 '헤어래집' 침탈을 주도해 집행유예나 재판계류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과 불구속 입건하고, 배후에 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이사회측 입장이다.

더구나 사건 당일에도 평택경찰은 신고전화를 받고서도 40분이나 늦게 출동했고, 폭력을 행사하던 난입자들을 단순 만류하다 아침 7시경이 되어서야 20명을 연행, 폭력사태를 (2면에 계속)

##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9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산·유성·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측의 노조 탄압상을 폭로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골프장 사주들이 지난 2001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C.C 노동조합의 민효준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측이 동원한 용역강제 2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 소화기를 뿌려대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며 사측의 탄압에 분노를 토해냈다. 폭행 당시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현재 조합원 9명이 입원중이라는 게 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합을 결성하고 있었던 여주 스키아일랜드C.C에서는 사측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우선 노조 탈퇴를 종용한 뒤, 정규직이 대거 탈퇴한 2001년부터는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을 전원 해고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한은경 노조위원장은 "2002년 2월 기존 단협이 만료되자 사측은 더 이상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 필증을 받고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한성C.C의 이영화 대외협력부장은 "공익위원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라며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와 더불어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자이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은 그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해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서비스연맹은 이후 노동부, 국회, 골프장협회 등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성준)

(2면에서 이어짐) 중단시킬 의지가 별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에바다복지회 이송한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에바다복지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평택경찰과 검찰에 의해 에바다 정상화가 가로막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암묵적으로 폭력행위를 방지하

## 주간인권호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쪽!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 (6.2) /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 (6.2) /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 (6.4) / 교육개혁시 민운동연대 등 시민단체, 네이스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청구키로 (6.5) / 정보교사가 네이스 해킹한 사실 밝혀져...교육부, "시스템 아닌 개인보안 뚫린 것"이라 해명 (6.6) / 전교조, 정보인권수업 시작 (6.9)

2. '군국주의 일본, 리로리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 (6.4) / 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 (6.6) /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의 큰 반발 부딪혀 (6.6) / 반전의원모임,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협 비난 (6.9)

3. 경찰, 누구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영장없는 체포 49%, 알몸수색 경험도 45% 달해 (6.3) / 경찰 "유사시에 대비한다"며 최루탄 훈련 재개키로...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 (6.5) / 살인누명 억울한 옥살이 20대 한 달만에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검찰 부검확인 않고 구속, 진범 뒤늦게 자백 (6.6)

4. 기타 청소년의회 탄생...선거연령 인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등 국회에 청원 예정 (6.3) /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공개 토론회에서 외국여성 10명 중 3명 폭력 시달리고, 2년 안 돼 이혼하면 아이 포기한 채 본국 추방되는 것으로 밝혀져 (6.3) /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 "보호감호 새 삶 전혀 도움 안돼" (6.3) / 최성창 전 에바다 이사장 연행...에바다 정상화 계기 마련돼 (6.3) /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유럽의 중요 앞 여성 행위예술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배상 판결 (6.4) /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1명이 하루 296명 진료 해 적정인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6.8)

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태기 검사는 "농아인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속해서야 되겠느냐"고 해명하고, "애초 실력을 행사해 농아원에 진입한 사람들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양비론을 펴며 구제단을 편들었다. (배경내)

● 오늘 인권이야기 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군부의 민주주의 압살 조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원들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의 앞에는 ‘버마 민주주의’가 드러누운 판이 놓여져 있었다.

나와우리, 아시아의친구들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가 국내 인권단체들과 개인들과 연대하여 개최한 이날 항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버마군부에 의한 계획적 테러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감금되고 민주 인사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가 표명됐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버마 북부지역을 지나가던 수지 여사 일행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일연대발전협회(USDA)의 ‘매복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10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버마군부는 이 사건을 군부와 민족민주동맹 지지자들 사이의 유혈충돌로 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수지 여사를 감금하는 한편 200여 명에 달하는 민주인사들의 체포와 가택연금, 대학 휴교, 민족민주동맹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군부의 계획된 테러”로 규정하면서 △감금된 수지 여사와 민주 인사들의 즉각 석방 △폐쇄된 민족민주동맹 사무소의 재개방 △1990년 5월 총선 결과에 따른 즉각적 정권 이양 등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버마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일부터 다니던 직

장마저 그만두고 삭발까지 단행한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도 함께 해 “Free Burma!”를 외쳤다. 지난 2001년 심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온 르윈 씨 역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한 ‘버마 정치범을위한지원연합’(AAPP)의 부처 공동 사무국장은 이번 테러의 배경에

대해 “버마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지난해 5월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에 제한 이후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척 하면서도 모든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계속 높아지자, 이번 테러를 통해 수지 여사와 민족민주동맹을 탄압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운동의 지도부로서 버마의 민주화와 학생 정치범 석방을 위해 활동하다 7년이 넘게 투옥생활을 해야 했던 부처 씨는 1999년 태국으로 건너가 2000년부터 ‘버마정치범을위한지원연합’을 결성해 해외에서 버마 민주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배경내)

##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뚝다

###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의 장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축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교육환경은 여전히 미비했고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차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생들간의 정보공유와 차별철폐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그 결과 이날 대구대, 서울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됐다.

그간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연대사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 출범식에서 편의연대 김형수 연구원은 “우선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힘을 기울여”라며 “지금은 지원 네트워크가 대학생 중심이라는 한

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참여대학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국·공립대학 장애인학생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학생 진학정보 웹사이트 구축, 장애인 특별전형 10년 평가 등을 진행하고, 웹진 발행과 장애인학생들의 국제 교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현황과 운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을 넘어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식)

[여제]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족수감 체온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현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기로

466일간이나 급속수감과 가족수감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66일간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인권위에도 지난 2001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9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특히 정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달 12일경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씨는 2000년 2월 재판 도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 같은 해 3월 7일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입소하면서 ‘급속수감’과 ‘가족수감’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정 씨는 2001년 6월 18일까지 계구를 사용한 채 수감생활을 해야 했으며, 이중 462일間は 가족수감에 묶여 지내야 했다. 특히 계구사용 후 처음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계구의 목적이란 할지라도 466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계구를 사용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정 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4백일이 넘게 정 씨에게 채워졌던 가족수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족수감은 양팔의 팔목에서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묶어 허리에 고정시키고, 다시 양 손목을 쇠고랑으로 묶는 계구를 의미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특히 가족수감의 착용은 수용자의 팔과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묶어 놓음으로써 수용자를 운동불가 상태로 만들고, 상반신을 완전히

제압하여 식사, 세면, 수면이나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가족수감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된 ‘수감’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은 가족수감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상희 변호사는 “결국 인권위가 현재 사

용되고 있는 계구의 문제를 짚은 만큼, 관련 규칙이나 행형법의 개정까지 정책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슬의 사용을 금한다든지, 안면보호대의 사용이후 수용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가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내달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 계구 사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근예)

<기자의 눈> 유엔 상임위원회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유엔 상임 인권위원회가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회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회는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얼마 동안 집적하는가”라며, “똑같은 정보를 학교 내에 설치된 CS에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유 위원회는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현 CS 체계 아래 1만8백70개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단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로 집적하는 네이스 체계로 전화됐을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유 위원회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회는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간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네이스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권고를 한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있음이 명확하다. 하지만 유 위원회의 문제제기는 분명 교육부가 아닌 인권위를 향하고 있다. 그것도 반전성명 등 평소 인권위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무척 못마땅해하던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기고를 하면서까지 말이다.

유 위원어야말로 혹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신뢰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닐까? 네이스 논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12일(목)

제 23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인쇄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암살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항목 흡사

공개된 자료 중 450명의 개인별 기록 카드를 보면, △성명과 생년월일, 체중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학력 및 경력(병역 포함) △전과기록 △교우 및 배우 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대통령도 당시 사찰피해 소송 참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인 명단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이해찬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방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대법, "자기정보통제권도 헌법 기본권"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보 수집 자체로 이미 손해는 발생"

나아가 판결문은 '사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대한민국)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보안사령부가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윤석양이 위와 같이 사찰관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가 윤석양에 의한 사찰관계 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고들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손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자체가 이미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스 해킹 없어도 이미 인권침해

이 판결은 비록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활동을 감시하고 사적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현행 네이스 체제에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 네이스에 보안장치를 강화해 설령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그간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주장해 온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에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인권침해를 종식시킬 수 없음을 대법원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내)

## 홍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홍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홍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3400명에 이르던 직원수가 현재는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은 임금마저 동결된 상태다. 노조는 41.1%의 임금상승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건물주인 태광산업(대표이사 이호진, 홍국생명 계열사)을 내세워 노조와 1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실상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는 손배·가압류 조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고, 이후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에 취해졌던 손배·가압류는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취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홍국생명의 의도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일

환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1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다른 사업장의 노조파괴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노조간부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법무팀에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총파업 등 노조의 강경 투쟁을 유발한 뒤 불법행위를 찾아내 노조간부에 대해 손배·가압류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형철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홍국생명지부 부위원장은 "홍국생명이야말로 교섭을 회피하며 노조탄압으로 일관, 파업을 장기화시켜 태광산업 사옥 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홍국생명은 부당노동행위 자행 및 파업장기화 유도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및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심문은 13일 오후 3시 서초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식)

## "내 개인정보, 담내지 말라"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적사항과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행동특성, 진로상담 기록 등 사적 정보가 입력돼 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 이들 정보를 보유하고, 이후에도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네이스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우 내밀한 정보들로서 학교장이 엄격하게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변화가능성이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개인정보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집, 보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13일(금)

제 23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 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처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경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기협 등 이익단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연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거듭해 왔고, 4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연수제

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 시행하자는 '병행 실시론'까지 나온바 있다.

최 공동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법안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며 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함께 연행됐다 석방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도 "발의된 고용허가제 법안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재계약을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 이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향후 큰 문제가 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15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 집회와 16일 국회 앞 집회 등 임시국회 기간 내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준)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역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의 본질을 알려내고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료집을 기획했다.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3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보호법의 역사, 보호감호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2장에서는 피감호자들이 재사회화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며, 4장과 5장에서는 박영두 씨를 비롯해 청송감호소 내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횡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 중인 피감호자 1천6백여 명의 인권증진은 우리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 자료집은 말하고 있다. 자료집은 무료로 배포된다. (최은아)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유헤정(02-741-5363)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02-777-0643)

##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식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위협이나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이 교수는 "우선 북한과 남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인적 교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헌법, 형법 등을 개정하고 유엔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식량난과 같은 당면과제의 해결에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이원웅 교수(관동대, 북한학)는 수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존재하는 현실과 그들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현실, 핵 문

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과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의 국가와 NGO 등이 전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국장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이라 비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이원웅 교수 역시 "최근 개선된 북한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여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오경섭 사무국장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보다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병규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폭압에 순응해서 인권침해를 당하

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과거 폭압적인 정치에 저항이 따랐던 우리의 현대사에 짓고 '북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 [고근예]

##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평택 검찰과 경찰이 에바다농아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에바다 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가 특별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평택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난입을 저지하던 사립들에게 중상을 입힌 구 비리재단측 농아인들에 대한 평택 검·경의 미온적 수사태도를 규탄하고, 경찰청과 검찰청이 특별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 재단측 농아인들이 장기간 농아원을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시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조현배 경찰청 경비 2계장을 통해 해명서만 전달했다. 최 경찰총장은 해명서에서 '최루탄 발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유사시 최루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압용 기본 장비로 되어 있는 최루탄 발사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용능력이 미숙해 정기적으로 훈련과 정비를 실시토록 한 것이며 최루탄 사용 검토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대규모 폭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일 뿐이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에 민가협 회원들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현배 계장은 "유사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국민의 동의 아래 최루탄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차 훈련을 실시한 경찰은 매달 최루탄 발사훈련과 매주 최루가스차량 운전요원 교육, 최루탄 정기 구매와 낙후장비 교체도 계획하고 있다. [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14일(토)

제 23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런 이적 판결 강력 규탄

“진보의런이 이적단체라면 진보의런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 단체다. 공안당국은 우리도 기소하라.”

13일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아래 진보의런)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아래 민교협) 등 55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21부는 진보의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조보건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 <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적규정 유죄 판결을 받은 진보의런 사건에 대해 “정권교체기에 극우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공안조작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02년 1월 이루어진바 있다. 이들은 또한 “진보의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6년간의 지속적인 사찰과 도·감청이 행해졌던 사실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황상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도 나와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왔는데, 이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의런이 주장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보의런이 못 다한 활동을 우리가 힘차게 해나가겠으니 사법당국은 우리를 기소하라”며 “기쁜 마음으로 국가변란의 주동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도 “재판부가 이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개념은 과거 많은 사회과

학자들이 한국사회를 규정하며 사용했던 개념”이라면서 “공안당국은 나를 포함한 동료 학자들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같은 판결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도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보건의료계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향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참가단체들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성준)

### 〈논평〉 가족수감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족수감과 금속수감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감과 가족수감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감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 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 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펴고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족수감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정당국의 태도다. 수십 년 동안 계구사용으로 인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천막농성 52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대공원의 책임기관인 서울시청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면담을 거부해 실무부서인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원관리의 입찰해지 및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공원과 이원영 공원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팀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시청 감사관 조사팀에서 밝혀낸 부분을 검토한 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향후 서울시가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조달청이 2003년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대원관리를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대원관리는 지난 2002년 응비 환경이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전까지 15년 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을 맡아 왔던 회사로 각종 비리와 일방적 정리해고로 문제를 일으켜왔었다.

1997년에는 문서를 위조, 임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져 대원관리의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01년에는 52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가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전원 복직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대원관리가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용역 노동자 전원이 다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가 사태해결을 위해 서울시 용역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 및 탄원 등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 서울대공원관리소에 해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시가 보내온

회신 내용을 보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었으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원관리가 2003년도에 실시한 서울대공원 환경작업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격심사 시 감점 등 제재 방안 및 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관리소는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태해결을 회피해 왔다.

남우근 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관리소가 이번 사태

##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을 겨냥한 집중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100여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시행령 통과 저지를 위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청와대와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주에도 노숙농성을 전개한 바 있는 민주노총도 16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는 단원노조 대표자들의 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청와대 앞 경제자유구역 폐기 농성장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차장은 “결의대회에는 전국 1천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농성에도 3백여 명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계획 철회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를 방지한다면 직무 유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비롯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박종식)

### 전국인권활동가 6월포럼 “전국 인권활동가들, 새만금과 만나다”

- 때 : 6월 21일(토) 오전 9시-20시
- 곳 : 전북 무안 새만금
- 참가 대상 : 전국 인권활동가
- 참가비 : 개인당 2만원
- 프로그램 : 새만금현장·농성장 방문/ 이야기마당/ 2회 전국활동가대회 제안
- 신청 마감 : 6월 18일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1-750-3455)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과업을 25일경 발의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내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동안 노동기본권의 전면적 후퇴와 교육불평등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 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왔다. 실제 17일 통과 예정인 시행령(안)에도 외국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최고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인 만큼, 시행령부터라도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올 7월 가동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노동·환경·인권 등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이틀 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500여명도 오후 늦게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노숙농성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17일 아침에도 대통령 면담 투쟁을 계획하는 등 시행령 통과 저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포함하는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 행동권 제약 등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제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시행령이 이날 차관회의에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은 1주일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전국민중연대 정영섭 기획부장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 에바다 농이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 농이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에 바다 농이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점돼 있던 농이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이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농이원을 떠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괴·납치사건으로 판단, 16일 오전 10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환 농이원장 직무대행은 "농이원생 한 명이 16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 재단측 직원 박미영 씨의 남편 윤모

2003년 6월 17일(화)

제 23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인권단체들이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부산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삭제되었지만, 현행 네이스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 학생의 행동특성과 (2면에 계속)

씨가 운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같은 날 구 재단측 직원과 졸업생들이 다른 농이원생 두 명에게도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에바다 농이교회로 가져가고 피어냈으나, 이 아이들이 고3이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구 재단측에 의한 유괴·납치사건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에바다학교 김지원 교장도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송문용 장학사를 만난 자리에서, 구 재단측 인사 10여명이 오전에 송 장학사를 찾아와 '농이원에서 무섭게 대해서 아이들이 농이원을 나온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을 구 재단측 관계자들은 알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배경내)

##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연예인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 오직 사람들의 가십거리일 뿐이고, 독자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끌어내려는 황색 언론의 소재거리일 뿐이다. 오랫동안 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여성 연예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얼마 전, 3년 동안 한 남자로부터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개그우먼 이 아무개 씨의 사건을 맡았다. 가해자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업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양주잔으로 이씨의 얼굴을 찍어 상처를 입혔다. 이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이씨가 포르노 배우라는 거짓말을 하며 출연시키지 말라는 요구까지 했다. 그는 폭력 남성의 전형으로서 진즉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사생활이 황색 언론에 까발려지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장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그녀가 우려했던 일들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3년 동안 '어떻게' 이씨에게 폭행하고 괴롭혔는지가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황색 언론은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가해자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애정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떠들어대자, 황색언론은 사실이냐 어찌됐던 가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무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이 호기심거리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속덕이는 동안 이 여성의 인권은 계속 짓밟혀왔던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 연예인들은 2중, 3중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셈이다. 1차적으로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2차적으로 황색 언론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며, 대중의 경박한 호기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여주는 황색 언론의 태도는 여성연예인이 인권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자신처럼 오랫동안 남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료연예인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어설픈게 이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이들의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의 인권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철준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4면에서 이어짐)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남아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00인 선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내)

##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 김중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사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요구(6.10)

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 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 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갖고 있었다"고 말 바꿔(6.9) / 미 '기업감시'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백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 3240명에 이른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6.11) / 유엔 안보리,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 통과시켜(6.12)

4.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나라"  
고 심미선·신효순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사과협정 촉구(6.10) / 미선·효순 1주기 추모 자주평화 실현 촛불대행진 행사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4만여명 모인 가운데 열려...전국 70여 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개최(6.13) / 사망 1주기에 외출 금지령 어기고 무단 외출한 주한미군이 음주운전 사고 낸 것으로 밝혀져(6.13)

5. 기타  
인권위, 466일간 가족수감에 묶여있던 정모 씨 진정과 관련, 가족수감 등의 자의적 사용이 수감자 인권 침해한다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6.9)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5개 인권사회단체, 진보의견 이적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같은 주장 펼쳐온 우리들도 기소하라"고 밝혀(6.1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18일(수)  
제 23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인 25개 직종에 이르러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97년 12월부터 정부의 각종 지침에 따라 본격화된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했고, 경비직의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도 12곳이나 됐다. 남법규차장은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최저임금 규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비직의 경우, 임금이 37만원 정도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조달청 '물자조달계획'이 저임금 용역 조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립 정책국장은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이 용역직과 그에 따른 폐해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5천만원 이상의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업체와

도 용역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2000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호안전관리공사가 대학당국이 예초 책정했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따냈으므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예년에 비해 5만원이나 깎인 임금(여성 40만원, 남성 45만원)을 받게 되기도 했다. 용역화로 인해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정책국장은 "사람을 '물자'로 취급하고 있는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을 제외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로 나선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부)는 △1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제가 아닌 3-4인 가족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정가 낙찰제'로의 전환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배경내)

##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와 109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어휴, 답답해라" 등을 연발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앞서 전국학살규명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증언대회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 북촌리 학살사건 유족인 부청하씨는 "국군이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인근으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1950년 포항 여남 송골계곡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동생을 잃은 안인석 씨는 "갓난 아기였던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평생 왼쪽 팔을 쓸 수 없게 됐다"며 "아직도 내 눈앞에 펼쳐졌던 피바다의 (2면에 계속)

##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

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피감호자를 청송과 같은 오지에 구금하여 집권, 외부통근 작업, 사회적응훈련 등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사회복귀를 촉진하겠다는 보호감호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호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감호소 내 훈련과 작업이 출소 후 직장을 구하거나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7명중 93.79%인 438명이 '아니'라고 답해, 피감호자들이 감호소의 작업과 훈련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호소 생활 중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응답자 284명 중 42.25%인 120명에 이르렀고, 응답자 4백52명 중 78.93%인 341명이 감호생활 중 저축액이 '5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또 보호감호 생활이 다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64명 중 87.93%인 408명이 '아니'라고 답해,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한 최초의 민간조사였다"고 설명했다. (고근예)

(1면에서 이어짐) 광경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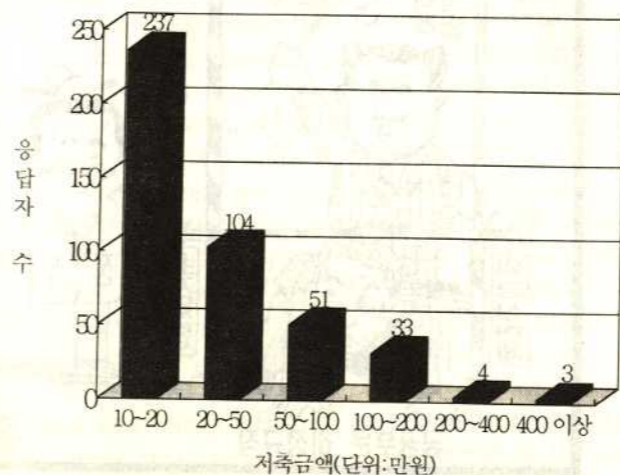
부여 '금강문인회' 학살 유족 류황렬씨는 "과거 50여년 간 빨갱이로 몰려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강문인회' 사건은 일제시대 독립활동을 했던 단체 회원들에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의 혐의를 씌워 경찰이 학살한 사건이다.

17일 현재 112일째 국회 앞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학살규명위는 지금까지 222개 단체의 공동 지지성명과 각계 1천인 선언을 이끌어내며 통합특별법 제정의 절박성을 알려왔다. 5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 보도연맹 학살 유족인 엄창주씨는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는 더 이상 희생자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말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종식)

보호감호소 생활중 현재까지 저축한 금액 (총 응답자 432명)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19일(목)

제 23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태풍이 찾아와도 비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활동가 40여명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강행 철회와 개인정보영역의 즉각 삭제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자, 네이스가 단식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미온적 반응과 중요한 문제지만 교육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뒤늦은 농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것은 정보인권 문제가 중대한 인권현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또 “이번 단식농성을 계기로 정보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백래군 상임활동가도 “네이스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농성장에서는 농성단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지 방문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보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도 개최됐다. 첫 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장이 맡았으며, 각계 인사를 초청해 길거리 특강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농성단의 계획이다.

농성단은 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다음주를 통제 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정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와 공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각계 네이스 저지 행동도 이어져

한편 학교현장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네이스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0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이두넷’(http://neis.idoo.net) 게시판에는 18일 현재 거부 서명자가 9천2백명을 넘어섰고, ‘전국민중고등학생연합’과 ‘네이스를반대하는청소년모임’ 홈페이지에서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14개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해 있는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홈페이지(http://noneis.jinbo.net)에서는 지난 11일 1차 소송에 이어 2차 졸업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아 25일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개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에 자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도 한창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㉔

###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접받지 못했다. 홀리스, 실업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제때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 등의 존재는 이를 반증한다. 게다가 시장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자본의 세계화가 사회권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사회권 운동의 국제화를 절실히 요청해왔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이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출범 과정 및 목표에 대한 토론에서 로지(경제·사회적권리센터, 미국)는 “사회권네트워크는 먹을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옹호하는 지구적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2000년 10월 미국, 2001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트워크의 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고, 2002년에는 대륙별 회의를 열어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참여 폭을 넓혀왔다. 홀리아타(CELS, 아르헨티나)는 “사회권 운동 단체들을 모으고 네트워크의 출범을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다”며 “사회권 운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합

의”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이미 웹사이트, 주제별 토론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사회권 관련 정보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escr-net.org)에선 사회권에 대한 각국의 주요 판례 자료실, 전세계 사회권 운동 단체 목록들을 찾을 수 있다. 또 △사회권의 사법심사 △발전과 인권 △HIV/AIDS △무역과 투자 △여성의 사회권 등에 관한 토론 그룹이 있다. 사회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도 벌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주제별 토론 및 실천이 사회권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골격을 이루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공동행동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식량권 단체인 피안(FIAN)의 빈트푸르는 “올 9월 WTO 제5차 각료 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 내년 초 인도 뭉바이에서 열

릴 세계사회포럼 등이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권의 진전과 후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일정”이라며 “그러한 공간들에서 사회권을 중요 의제로 만들면서, 공동 실천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국제법정의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네트워크의 윤곽을 만들어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도 인상적이었다. 지역별 균형, 젠더 평등, 민중운동의 필수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로 위원들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국내 연대기구들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여겨졌다.

이제 공식 출범한 사회권네트워크! 뒷걸음질치는 사회권의 옹호를 위해 정보 교류를 뛰어넘어 집합적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권네트워크에 거는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희망일 것이다. (이주영)

##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사회권 침해를 당하는 민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권 운동의 가장 기초다. 이에 이번 총회는 첫날,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백80만명이 무토지 빈농들인 반면, 1%의 인구가 절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브라질. 이제 가난한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는다. 대신 ‘집거하고, 저항하고, 생산하자’며, 버려진 땅을 경작하고 먹을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ST). 아텔라(MST, 브라질)는 “7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무토지농민들의 토지점거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돼, 지금은 토지개혁과 사회변화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진전됐다”며 “앞으로도 식량권 및 땅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아텔라는 서구인들은 땅을 재산으로 보지만, 땅은 자연으로부터 빌려 후손들을 위해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 믿고 덧붙혔다.

인도의 나르마다 댐 건설 반대운동을 해 온 카일라슈는 “나르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을 끌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댐 건설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 수단을 잃었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환경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에 수도가 끊겨 거리의 소방용 물을 틀어 머리를 감는 흑인 여성의 모습, 이것은 ‘부유한’ 나라 미국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체리(켄싱턴 복지권 연합, 미국)는 “미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빈민과 노숙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시시피부터 워싱턴 디씨까지 29일 동안 ‘의료보장, 생활임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집과 밥,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를 정부에 요구하며 행진을 벌인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최근 4년 새 근골격계 질환이 961%나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이른바 '산재환자 치료제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심의결과를 발표, 거꾸로 가는 산업안전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공공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제위)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 및 치료종결 기간 명시'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산업안전정책의 개악을 시도해 왔다.

이날 규제위는 경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판단, '해당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노동단체들의 의견이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근골격계 환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환자 인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규제위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근골격계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의 송준섭 씨도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직접 노동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규제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또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종결 시한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기준지침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실제로 법령으로 치료종결 시한을 명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역시 19일 성명서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조기치료가 어려워 근골격계 환자를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에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위가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려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규제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박종식)

2003년 6월 20일(금)

제 23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역은이: 정보공유연대 I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 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자산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자본의 이익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가가 1천원도 안되는 글리벡을 1만5천원을 내고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백혈병 환자의 이야기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으나 집에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는 사례는 지적재산권이 이용자의 이용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적재산권이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정보제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적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라고 규정하며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고리가 맞물릴 때, 기술과 문화가 풍요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 아래 어떤 지적재산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고, 누구나 지적재산에 대한 이용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은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은아)

## 병역거부 다규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규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규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규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규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거부하겠다는 분위기가 일 때 인권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6월초 보수언론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의 제작 지원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사실을 통해 "인권위가 병역거부를 부추긴다", "국가예산 지원이 인권위 직원의 검도도 없이 이뤄졌다"며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이 다규멘터리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또 다규멘터리가 완성된 후 그 내용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작품에 대해 지원 자체만으로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승 교수(국민대 법대)도 "총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고 있는 많은 젊은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문제삼는 국회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실정법 수준으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권위의 존재 의의인데, 여기에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지원을 결정한 선정위원들의 구성 자체에 이미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유엔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에 대해 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마저 없는 대체복무제 법안에 대한 법사위 의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의 이러한 맹공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라크전 반대 의견과 네이스의 인권침해 요소 지적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에서 비롯된 트집잡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강성준]

#### 올 인권영화제 상영작 배급

- <감춰진 전쟁>, <마이 테러리스트>, <파워 앤 테러> 3개 작품
- 각 30,000원
- 영화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 주문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2407)

##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규 <소금>

###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

지난 4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이 공개돼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다. 최근 제작된 독립 다규멘터리 <소금>은 그 중에서도 소수자인 여성 철도노동자의 위험받고 있는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지난 2000년 <평행선>으로 인권영화제와 만났던 독립제작 프로젝트 '희망'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카메라로 고발했다.

수송 분야에서 일하는 김남희 씨는 4년만에 생긴 첫 아이를 유산했다.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입현'이 그녀의 주요한 업무인데, 임신 중에는 무리한 노동이다. 임신기간 동안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산을 하게 된 것이다. 유산은 김남희 씨만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고 작품은 말한다. 지난 1년간 감독이 전국 철도를 누비면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은 상당수 유산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하나 같이 '모성 보호'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살인적 노동 조건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교번제' 근무로 인해 만성 피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평생 소원이 '하루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잠깐 교대해 줄 동료도 없어 매표소에서 표를 팔면서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 노동자는 "아이를 낳는 날까지 나와서 매표소를 지켰다"며 한숨을 내쉰다. '철도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은 목숨까지 앓아가는 희생을 감요당하고 있다.

작품은 철도를 따라 사계절을 배회하면서 마치 로드무비 같은 서정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아련한 그리움 같은 영상은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살인적인 상황과 대조되어 아이러니한 여운을 남긴다. 배우 방은진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고 민중가수 윤미진 씨가 주제가 '어떤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김정아]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3일째]

###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하라 !!!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 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의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무인소 특별위원회'에 법안 처리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학살규명법 수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법안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학살규명법은 또다시 실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투쟁본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족들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물어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

2003년 6월 21일(토)

제 23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호주제 폐지" 국외 건널목 상정시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주위에서 건널목(=2면에 계속)

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투쟁본부는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투쟁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로 114일째를 맞이한 농성을 정리했다. (박종식)

###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올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삼아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커다란 인권 재앙을 몰고 올 '빅 브라더'의 도래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네이스의 시행 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이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권에 대한 무지로, 혹은 기왕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체념으로 네이스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자기정보를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질 당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들이 직접 나서 '자기정보 되찾기', '인권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례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는 명백한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교육부가 항의 방문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여전히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작금의 사태는 이미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네이스를 비롯한 일련의 '전자정부'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불모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개인정보가 빼곡이 입력돼 있는 네이스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4일째] STOP 정보도둑질! STOP 빅 브라더!

##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㉔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권과 주거권,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 교육권 특별보고관을 제외하고 세 영역의 특별보고관 내지 보좌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 전문가들은 인권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권리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사태가 발견될 때 책임 있는 국가나 관련 기구를 상대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은 자신이 아니라 권리"

밀룬 쿠타리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토지, 강제퇴거, 물의 이용과 위생, 건강, 빈곤 및 세계화의 영향 등 적절한 주거에 관한 폭넓은 쟁점들을 검토해왔다"며 "올해는 여성의 적절한 주거권 실현에 대한 초보적 연구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냈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또 지난 3년 동안 루마니아, 멕시코, 페루,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도 방문해 주거권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밀룬 쿠타리는 "앞으로 물에 대한 권리와 위생, 세계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 주거권 지표의 개발과 평가 방법, 장애인에 대한 주거에 대한 권리로 연구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하비타트 연합의 조셉 체크라

는 "집은 자신이 아니라 권리"라며 "특별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하게 하거나 해당 국가에 긴급 서한을 보내도록 해 국가가 주거권 보장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페루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굶어 죽는 것도 제노사이드"

존 지글러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보좌관인 셸리 앤은 "특별보고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세계적 차원에서 식량권의 쟁점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무역 자유화가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식수 문제, 땅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량권 단체인 피안(FIAN)의 마이클 윈트프는 "WTO 등 무역과 식량 문제, 땅과 물의 사유화 문제 등을 제기할 때 특별보고관의 연구 보고나 조사방문 활동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을 방문해 식량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기도 하는데, 대표적 성공 사례로 브라질이 꼽혔다. 마이클 윈트프는 "존 지글러가 2002년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기아로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 '제노사이드'(집단살해)라고 표현해 식량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 보고서는 브라질 내에서 경작되지 않은 채 버려진 땅에 대해 농민들의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논의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기여했고, 브라질의 새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기반해 '기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셸리 앤은 "식량권에는 먹을 권리뿐 아니라 식량에 대한 자급권(the right to feed oneself)까지 포함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유무역에 의해 소농

들이 불이익을 보고 식량주권이 훼손되는 것 역시 식량권의 중요한 문제"라고 관련된 질문에 답했다.

가난과 건강의 연관성 찾기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바로 지난해에 임명돼 이렇다할 활동 내용은 아직 축적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열중해왔다. 보좌관인 주디스 부에노는 "특별보고관 폴 헨트는 건강권 개념을 확립하고 실현 사례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권 특별보고관이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가난이 건강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건강상태가 초래하는 낙인 및 차별의 문제다. 주디스 부에노는 구체적 쟁점으로 빈곤 완화 전략, 정신적 건강권, 무역 정책과 건강권 등을 꼽았다. (이주영)

(11면에서 계속) 상정 시위를 전개했다. 건널목 상정시위란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건널목을 오가며 요구 사항을 알리는 신종 시위형태다.

이날 공동연대 활동가 20여명은 '호주제 폐지', '개인별신분등록'이라고 쓰인 천을 두른 채 1열로 들어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국회 앞을 1시간 가량 오갔다. 이들의 이색 시위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끌며, 호주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란 모든 국민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분등록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공동연대는 자식의 성을 부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성씨 선택의 자유'도 확대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범용)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4일째 오늘의 주요 일정

- 18:00 네이스 반대집회
- 18:50 4번째 길거리투쟁
  - "문화와 정보인권"
  - (강내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19:20 문화공연
  - 이지상/ 전교조 선봉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지 1월을, 대전 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지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교도소 측이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눕는 것, 청소 등 정돈을 소홀

히 하는 것까지도 징벌을 부과하는 등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교도소 당국이 징벌을 남용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관련해

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권위는 의문을 제기했다. 징벌위원회 구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을 전제로 하여, 징벌결정에 대한 수용자의 불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는 막연히 '잘못된 부분을 시정 혹은 개선하라'는 선에서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그간 인권위가 권고 후 관계부처에 권고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권고의 효력 역시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유혜정)

##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인권사회단체들이 23일부터 27일까지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포, 정보인권 등에 대한 인식 확산과 NEIS 폐기 촉구 공동행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네이스 강행 저지와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사(체계)"라며 "오는 25일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에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

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문제나 정보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 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 이미 도입돼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등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렇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은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해내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커리어우먼이다.

그녀가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처음 대기업 자동차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중증장애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딜러라는 직업이 빠른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회조차 주길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의지는 결실을 거둬 현대자동차 올림픽대리점 딜러가 될 수 있었고, 눈물과 노력으로 삼년을 일해온 보람으로 지금은 대리점에서 인정받는 딜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어렵게 딜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할 때, 수진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일을 그만뒀어야겠다고 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 건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남들과는 달리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슈퍼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를 보면 실감할 수가 있다. 늘 마음이 바쁘게 되곤하면서 시장에 들러 반찬을 사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며칠 전 수진 씨는 건이 짝꿍 소현이를 만났다. 소현이는 "아줌마가 건이 엄마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점심 급식에 못 오시는 거죠? 다른 애들 엄마들이 그랬어요"라며 건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말해주었다. 소현이는 개구쟁이 건이가 친구들과 바다를 구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웃에 흠뻑 묻히고, 코드 흘리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자기 엄마에게 얘기했었다. 그러자 소현 엄마는 "내가 참아. 그 애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그래. 장애인들은 다 그래"라고 했었다. 수진 씨는 명치가 걸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의 등뒤에 따라다니는 '엄마가 장애인이니까...'라는 말. 아들의 개구쟁이 모습을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봐주지 않고 장애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분하고 가정교육을 못 받아 개구쟁이고 버릇이 없으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평소에 그녀가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몸에 애들은 깨끗이 데리고 다니네" 하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새삼 그녀는 다시 생각해본다. 장애를 가진 엄마는 비장애엄마와 무엇이 다르기에 아이들도 다르게 보여지는 것일까. 그녀는 장애가 있는 엄마이지만 전문직업도 가지고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더 깨끗해야 되고 장난꾸러기여도 안되고 공부도 더 잘해야만 한다고, 그래야 장애엄마의 자식이라는 말을 안 듣는다며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 그녀는 "장애엄마에게서 어쩌면 저렇게 대단한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

##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가 네이스 선택"(6.19)/ 교육부, "일선 학교 대부분 네이스 결정"...전교조 조사결과와 달라(6.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실장, "네이스 사태 일방적 전자정부 추진방식서 기인"(6.19)/ 전교조, 연가투쟁에서 네이스 폐기·교원 지방직화 저지 요구(6.21)/ 국민기도회 등 보수단체, "전교조 반미교육이 나라 위기 초래"(6.21)/ 교육부, 연가투쟁 교사 교육청별 징계 요구...전교조, 징계 강행시 강력 대처키로(6.23)/ 교육부, 교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 항목 삭제키로(6.23)/ 52개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 열어(6.23)

###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아(6.17)/ 정·재계 간담회서 산업연수생제·고용허가제 병행키로 합의(6.20)/ 석현호 교수 등 5명, 4년 간 실태조사...이주노동자 주 14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한국인 동료의 65% 수준(6.20)

### 3. 누가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태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괴(6.21)/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과업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 밝혀(6.23)/ 경찰, 궤도연대 파업에 대비해 경찰이 운전석에 동승하고 태업 시 연행키로(6.23)/ 경제5단체, 총파업 즉각 중단 촉구(6.23)

### 4. 기타

청송 피감조사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규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

퇴직하셨다면 붉은 눈으로 하늘을 본다. 그런 그녀에게서 더 이상 장애여성 커리어우먼으로서의 당당함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박영희님은 장애여성공간 대표입니다.)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째] 네이스는 빅 브라더 부르는 주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진상 규명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홍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하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내놓았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 수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나, 자살로 처리된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는 85명의 사망자 중 44명이 자살로 처리됐지만, 이중 의문의 죽음이 자살로 단정된 경우도 허다할 것으로 추정된다.

90년 자살처리된 홍완표 일병의 어머니 윤옥수 씨는 "군 당국은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언제나 당하고 산다"며 군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박종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지방과학진흥법 등 유사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 시한부 파업 등을 벌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배경내)

##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 장애인가게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가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폭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연대시설추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가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빠꼭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불 기회마저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다보기

##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 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지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지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

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

우선 인권위의 권고가 '인권의 시각'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그 동안 교도소당국이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내세워 조사실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또 다시 '증거인멸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또 연속징벌은 그 참혹함과 가혹함으로 인해 당연히 폐지돼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연속징벌의 가혹성을 완화만 하겠다는 발상 역시 인권위가 '인권적 기준'이 아닌 '법률적 견해'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의 권고가 종합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징벌문제는 각 관련 조항이 모두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는 '종합적 대책'이 아닌 사안별 구제와 권고에 그치고 있다. 권고의 내용 역시 "~등을 폐지·시정하라"는 선언적 요구에 불과할 뿐, 소내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 개선책은 담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차 지적돼 온 것처럼 권고 결정 후 후속 대응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수임 사항은 비단 '판단'과 '결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안을 사회의제화시키는 것과 관계 부서가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6차례에 걸친 징벌제도와 관련한 권고가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수십 개의 개혁적인 권고보다는 단 한 가지의 권고라도 제대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다. (유혜정)

<특별 기고> 김선미 (고3, '청소년의 힘' 회원)

##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나,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가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항이니 일단 시행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이스에 대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만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문제의 근저에는 군대와 흡사한 '하향적 명령' 구조로 짜여있으면서, 명령체계의 가장 끝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않는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사 학생들이 네이스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은 학생을 관리와 행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볼 뿐, '교육주체'로서 교육제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생은 교육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언제나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당한다. 네이스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나의 민감한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관한 결정에서도 소외당했다.

학생은 '교육주체'이지만 의사를 반영할 길도 없는 구조적으로 대상화, 객체화된 나약한 주체이다. 그래서 학생에게 '교육주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의미없는 용어다. 정보인권에 대한 담론 속에서 '정보주체'라는 시각이 새롭게 대두되었지만, 정보사회조차도 학생을 객체화시킨다면 '정보주체'라는 용어 또한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네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주체'인 학생을 객체화시키지 말고, 이성을 지닌 주체적 인간임과 동시에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에 채택된 이 선언의 내용이 2003년을 사는, 네이스에 의해 발가벗겨진 고3에게는 더없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8일째] 인권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정보화는 독약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 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 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52개 인권·사회·교육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해 교육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서 네이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6월중 교육부 산하에 교육정보위를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정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오는 30일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각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5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정보위가 또다시 네이스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공개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정보위가 또다시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된다면, 지난 3월 구성돼 네이스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

로 전락했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같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팀장도 “총리실에서 오늘 새벽에서야 추천 의뢰 팩스를 보내 오늘 중으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이렇듯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은 교육정보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정보위를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

2003년 6월 26일(목)

제 23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인적 구성의 원칙으로는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보장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8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리실을 방문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송원찬은 주위의 권유로 이날 단식을 접었다. (배경내)

##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해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2002년 1월 현재, 박해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은 아시아에만 570만, 전세계적으로는 1200만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2001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은 에디오피아인 데구(Degu) 씨

는 “난민인정으로 육체적 피난처는 얻었지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쳐와 장학금 지급, 보험료와 교통비 절감 등 기초적인 지원과 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색한 난민인정뿐만 아니라,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난민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여전히 험난하다. 2003년 5월 현재 22개국 17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9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장 박찬운 변호사는 △난민인정절차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이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면에 계속)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㉔

##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초국적 기업과 시장이 지배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는 인권에 어떤 먹구름을 드리우는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하는가? 국제사회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총회 셋째날인 10일은 이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뤘다.

“물이나, 아니면 밥이나”

이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중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99년 수자원 관리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 짐 솔즈(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된 데는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한 세계은행의 압력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백텔사는

혈값에 코차밤바의 수자원관리 사업권을 따낸 후, 상하수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길어 쓰는 우물, 농업 용수에까지도 요금을 매기고 통제했다. 도저히 비싼 수도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2000년 1월부터 거리로 나와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17세의 소년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결국 백텔은 같은 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아 정부를 세계은행의 무역 분쟁법정에 제소하는 보복에 나섰다.

짐 솔즈는 “WTO, 세계은행, IMF 등 무역 및 금융기구들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까지 사유화시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들 기관들은 돈을 들고 나가 버리고, 정부는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 무역기구들의 인권침해를 법적 심판대에 올리면서, 불처벌의 악순환을 어떻게 깰 것인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린 죽어간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값싼 에이즈 치료약의 공급을 위해 싸우는 남아공 ‘치료행동캠페인’의 만

들라 마즐라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약 430만명이 HIV/AIDS에 감염돼 있는 남아공에서 가난과 죽음이 직결되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제약회사와 생존권 옹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 만들라는 “특허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하게 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을 공격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법정 싸움에선 승리를 거뒀지만, 정부가 법률 시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다국적 기업과 타협할 때 시민들은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에이즈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수자원관리 체계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의약품의 공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권과 이윤의 충돌의 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차별금지·국제협력·후퇴조치 금지 등 기본적 인권의 책무를 국가에 촉구하며 사유화와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제동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은,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다른 한편 인권을 옹호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만드는 일 역시 꿈으로만 여길 일이 아닐 것이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난민 신청자에게 일시적 추방 제외조치 외에는 주거·취업 등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출신국 정치 문제에 대한 난민들의 정치활동 보장 등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담은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 현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종기구인 ‘난민인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해 독립된 의결기구로 ‘난민인정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모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관준 계장은 “외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13개 소수 민족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줘마네트워크(JPNK)의 로넬 차크마(Ronel Chakma) 사무국장은 “회원 10명이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정 결정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농촌 폐가를 빌려 마련한 단체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마련하고 있다”며 난민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강성준]

##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9일째] 정보 집적은 통제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에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 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에서 사퇴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그간 사용자 위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안을 고수해왔고, 공익위원들도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그간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백원(시급 3,10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조사된 29세미만 독신 1인 노동자의 최저생계비가 1백1만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러나 경총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월말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53만원 수준을 고수해왔고,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공익

2003년 6월 27일(금)

제 23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위원안도 지난 24일 55-59만원 수준에 그치는 액수로 제시됐다.

이토록 낮은 임금수준은 비정규직의 70%를 넘는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 입찰 시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돼,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만난 김춘식 씨(61세)는 “입에 풀칠하고 약값이라도 벌려면 아무리 알뜰히 살아도 한달 1백만원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정역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 씨가 하루 9시간씩 한달 꼬박 일하고 받는 기본급은 정확하게 현행 최저임금인 514,150원에 불과하다. (배경내)

##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968년 박정희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도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족수감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만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지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징벌과 함께 계구를 사용한 것이나 466일간이나 계구를 사용한 것, 가족수감을 사용하여 인간적 생활을 못하게 한 것 등은 행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수용자를 억압하고 관리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였다”며, “우리 헌법은 물론 각종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도 정모 씨 사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가족수감과 급속수감

의 사용은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인데도, 한국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98년부터 유엔은 1984년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날(1987년 6월 26일)을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로 정해, 협약의 이행과 고문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해 오고 있다. (고근예)

##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에 씨 긴급 체포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에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된 양봉에 씨(전 회계담당직원)의 배후에 양봉에 씨(양봉말 씨의 누나)가 있다고 판단, 양 씨를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날 오후 김지원 교장이 양봉에 씨에 이어 양봉에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6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박태기 검사로 다시 변경됐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에바다에 폭력 난입한 구 재단측 사람들을 전 원 불구속 처리한 바 있다. (배경내)

##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뒤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봉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집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주위의 평은 ‘너무 목적이 많다’는 것. 무엇보다 김 감독이 달아낼 수 없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들의 ‘순박함’이라고 한다. 파업 초기 국민의례를 할 정도로 ‘합법투쟁’을 고수했던 순박한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들이 처한 ‘기만적 착취의 구조’를 자각해 가는 과정이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는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쓰디 쓴 현실’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 파업 참가자들은 ‘적색분자’로 분류되어 일손이 잘리고 말았다. 1년 반 만에 살던 전셋집은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월셋집’으로 변했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용차’에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동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여기서 나가면 텐트라도 치고 살아야 한다’고, ‘죽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역설을 토해낸다. (김정아)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추진위(가) 공동집회 ● 오늘 7시 명동성당 들머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6월 28일(토)

제 23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정보위의 올바른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내이스를 강행하면서 교육정보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위가 구성된다면 내이스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내이스를 전면 재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김석연 사무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에 대해 “설령 연가투쟁이 관례에 의해 실정법 위반이라 규정했다 하더라도 교사들을 굳이 구속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내이스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이날 단체들은 향후 내이스 문제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의 대응을 결성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인권

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내이스 반대 투쟁을 벌이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공대위는 내이스를 포함한 정보화사업에서 정보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는 단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건 국무총리는 이세중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를 교육정보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위원 내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 구성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정리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식농성단은 정보인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배경내)

###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가난한 저임 노동자들의 마음은 한차례씩 바닥을 친다. 그네들 기본급의 ‘맞춤 기준’이 될 최저임금이 한해의 고달픔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또 얼마나 더 이 악물고 살아야 하나. 말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저임 노동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재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 지점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에 안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다. 죽지 않기 위해 저임 노동자들은 산업에, 철야에 죽지 않을 만큼 자신을 혹사시킬 데니가.

바로 어제, 올 9월부터 1년 간 적용될 최저임금도 그렇게 결정됐다. 56만 7260원(시급 2천510원).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평균 생계비 194만4천원과 비교해 볼 때, 고작 29%밖에 안되는 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모두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안된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사용자 위원들과 간판만 ‘공익’인 위원들끼리 이렇게 정해버린 것이다.

예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백원(시급 3,100원)이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외국 의 경우 통상임금의 1/2 내지 2/3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또 독신 1인 노동자(29세 미만)의 필요 생계비가 1백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계의 요구안은 오히려 모자란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조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노동자간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이렇게 실종됐다.

최소한 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아닌 것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라 규정한다. 더 이상 ‘최저임금’이란 이름으로 저임 노동 착취를 합법화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 동안 내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추련,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히고, 다음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어서 법 제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장추련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열려 장애인 차별 실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례 발표에 나선 장애인권문제연구소 조병찬 간사(지체장애 1급)는 보험가입이 거부당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조 간사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한달 후 ‘의료적 이유로 거절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그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인협회 기획팀 윤정기 씨(청각장애)는 “96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 영어과목이 토익, 토플, 텡스 성적으로 대체돼 사실상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장추련의 생각이다.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정 전문위원)는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으로는 장애인 차별이 가진 특수성을 포괄하기 힘들다”며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존하는 미국,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은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권리구제수단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오상 사무관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추련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정도까지 복지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올 12월 국회 입법 청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기초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식)

<진단> 철도관련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리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과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기본법) 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예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설공단법’과 ‘철도운영공사법’도 동시 추진했으나, 이중 운영공사법은 일단 보류된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철도관련 주요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런데도 이들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철도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의 비판이다. 4년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게 되면, 요금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철도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와 경쟁체제로의 철도의 전환 움직임은 지난 3월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철도사업법’(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철도사업법(안)은 철도를 운송(여객, 화물)과 차량·장비사업 등 여러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단과 공사가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공사의 분리 시작은 세분화되고 경쟁 기업화되는 철도의 시작이며, 철도의 체제변경은 결국 공공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박 소장은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분리’가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통신과 통신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시작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국제, 국내, 장거리, 이동통신 등의 사업분리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통신을 비롯한 모든 통신산업의 민영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철도기본법’ 등의 개혁방안은 국가기간산업에 이익 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철도사업법’은 ‘철도민영화’를 현실화시킬 법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논의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는 ‘허울만 공단·공사인, 경쟁적 상업기업들로 쪼개지는 철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고근예)